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 총론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김영배 · 민병덕 · 박주민 · 우원식 · 정태호 · 홍기원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 목적

-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생위기 극복’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토론회 추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민생회복’ 방향과 해법 모색
- ✓ 연속토론회(8회), 매회 세미나 결과 언론브리핑, 원내 정책·입법과제 제안 등

■ 행사 개요

- 시 기 : 2023년 3월 08일(수)~4월 26일(수), 14:00~16: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 코로나 확산 시 온라인 화상회의만 진행)
- 행사명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 주 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주 관 : 매회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명단 아래 참조)
- 참 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 운영 방향

- 국회의원(책임의원) 좌장·토론자로,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전문가를 발제·토론자로 섭외
- 사전에 관련 민생의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현안 리스트 정리
- 연속토론회 진행 후 제안된 입법과 정책에 대한 추진 등 실사구시적 운영
- 참여 의원이 많을 경우 금융, 노동, 주거, 공정경제 등 분야별 분과 구성 및 운영

■ 진행 방식

- 진행 방식
 - 매회 각 분야별 좌장을 맡은 국회의원이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전달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 를 도입해 토론회의 책임성 확보

- 분과별(과제별) 책임의원 사전 모집(총 39명)

- (총론) 박주민(좌장), 김영배(간사/토론), 민병덕, 우원식, 정태호, 홍기원 의원
- (금융) 박주민(좌장), 민병덕(간사/토론), 김성주, 신동근, 양경숙, 오기형, 이동주 의원
- (주거·부동산) 전해숙(좌장), 조오섭(간사/토론), 박상혁, 서동용, 윤준병, 이수진(지), 홍기원 의원
- (중소기업) 정태호(좌장), 김경만(간사/토론), 김교홍, 김한정,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장섭 의원
- (소상공인) 서영교(좌장), 이동주(간사/토론), 김경만, 김주영, 민병덕, 박주민, 윤영덕 의원
- (노동·고용1) 이학영(좌장), 이수진(비)(간사/토론), 어기구, 최인호 의원
- (노동·고용2) 홍익표(좌장), 유정주(간사/토론), 김승원, 소병훈 의원
- (노동·고용3) 남인순(좌장), 최혜영(간사/토론), 권인숙, 서영석 의원

- 토론회 진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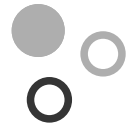
토론회 전	토론회	토론회 후	최종
국회의원,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과제 논의 및 방향 설정 간담회	⇒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 및 토론	⇒ 매회 토론회 결과 언론브리핑	⇒ 토론회 결과 정책위 등 전달 및 과제 수행

○ 진행 : 3.8.(수) ~ 4.26.(수), 주 1회(수요일), 14:00~16:00(120분), 총 8회

- (1~4차) 매회 주제발표 50분(2인), 지정토론 45분(3인), 청중토론 20분(자유토론)
- (5~8차) 매회 주제발표 30분(1인), 지정토론 60분(4인), 청중토론 25분(자유토론)
- 매회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과정에 참여
- 유튜브 동시 생중계 : 텔리민주 TV 등

○ 결과물 활용 방안

- 매회 토론회 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 토론회 직후(16:30), 동일 장소 또는 소통관
 - 언론브리핑 현장에 각 분과 책임의원 전원 + 박주민, 정태호 의원 참석
 - 언론브리핑 내용 정리한 보고서 발간 : '민생회복 00대 과제' (5월 초)
-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에게 정책 제안(5월 중순)을 통해 입법 추진
 -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공정경제 정책 및 입법과제 제안
 - 2024년 제22대 총선 민생·공정경제 관련 공약 제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 기간 : 2023. 3월 ~ 4월(총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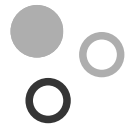
○ 주최 : 민주연구원 x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1회 (총론)	2023.3.08.(수) 14:00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 내용: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거시경제 위기와 영향 진단, 국제 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상황 진단,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회복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방향 모색 ◦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책임의원) ◦ 발제1: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2: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 토론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 토론2: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토론3: 김영배 국회의원(책임의원)
제2회 (금융)	2023.3.15.(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 내용: 자영업자, 영끌세대, 서민에 대한 채무상담과 재기지원을 결합한 원스톱 채무자 지원행정, 채무자의 채무조정 상담 및 재기지원(업종·직업전환, 재창업 등) ◦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책임의원) ◦ 발제1: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 ◦ 발제2: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1: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 변호사 ◦ 토론2: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토론3: 민병덕 국회의원(책임의원)
제3회 (주거·부동산)	2023.3.22.(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 ◦ 내용: 무주택 세입자 피해구제(전세사기 피해, 경매단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경락대금 세입자 우선매수권 행사 등),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대책(매입임대 확대 등 임대지원 강화) ◦ 좌장: 전해숙 국회의원(책임의원) ◦ 발제1: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발제2: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론2: 김대진 세입자114 사무처장 / 변호사 ◦ 토론3: 조오섭 국회의원(책임의원)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4회 (중소기업)	2023.3.29.(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중소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 내용: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 등 기술변화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기후·에너지 위기,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위기와 대안 모색,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협회의 단체교섭권, 원재료 공급가격 사전예고제, 정의로운 업종·직업전환 지원 등 좌장: 정태호 국회의원(책임의원) 발제1: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변호사 발제2: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1: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토론2: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3: 김경만 국회의원(책임의원)
제5회 (소상공인)	2023.4.05.(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내용: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독과점 폐해로 인한 위기와 대안 모색,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완화, 지역화폐 정책 지원 등 좌장: 서영교 국회의원(책임의원) 발제: 김남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변호사 토론1: 정종열 전국가맹정주단체협의회 자문위원장 토론2: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토론3: 김현성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前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토론4: 이동주 국회의원(책임의원)
제6회 (노동·고용) ①	2023.4.12.(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 내용: 기후위기, 기술변화에 따른 미래의 노동과 고용,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 개념의 확대 및 단체교섭권 부여, 화물차 안전운임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등 모색 좌장: 이학영 국회의원(책임의원) 발제: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1: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토론2: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3: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4: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책임의원)
제7회 (노동·고용) ②	2023.4.19.(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 내용: 웹툰작가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실태조사 보고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모색, 콘텐츠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위한 제도 논의, 문화예술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등 좌장: 홍익표 국회의원(책임의원) 발제1: 김종휘 변호사 / 前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발제2: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1: 범유경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 / 변호사 토론2: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3: 유정주 국회의원(책임의원)

분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제8회 (노동·고용) ③	2023.4.2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와 극복 방안 ◦ 내용: 돌봄노동자의실태와 처우개선 등 법적 보호 방안 모색, 돌봄노동 민영화 위기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 좌장: 남인순 국회의원(책임의원) ◦ 발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토론1: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 ◦ 토론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토론3: 윤지영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4: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5: 최혜영 국회의원(책임의원)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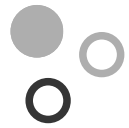
■ 개요

- 일 시 : 2023.3.08.(수) 14:00 ~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주 제 :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 주 최 : 민주연구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진행순서

시간		순서		주요 내용	
~14:00		사전등록			
14:00~14:15	15분	개회식	국민의례	진행 사회	
			축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환영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환영사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개회사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개회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14:15~14:20	5분	토론회	장내정리 인사말	◦ 좌장: 박주민 국회의원(책임의원)	
14:20~15:10	50분		발제	발제1	◦ 주제: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 거시 경제
				발제2	◦ 발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15:10~15:55	45분		지정토론		◦ 주제: 민생위기 극복 윤정부 정책의 문제와 과제
					◦ 발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 주제: 소상공인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모색	
15:55~16:00	5분	종합토론		◦ 발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주제: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 발표: 김영배 국회의원(책임의원)	
			종합토론	◦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Contents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소개 i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iii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회 프로그램 vii
- 목차 ix
 - 축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xi
 - 환영사(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xii
 - 환영사(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xiii
 - 개회사(정태호 민주연구원장) xv
 - 개회사(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x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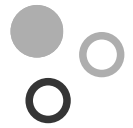
■ 발제문

- 1.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 거시 경제 1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2.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 국제 경제(산업 & 통상) 21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 토론문

1. 민생위기 극복 윤정부 정책의 문제와 과제 41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2. 소상공인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모색 57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3.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65
김영배 국회의원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님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달간 매주 진행될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시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의원님과 시민단체, 직능단체, 노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나 싶었지만, 고물가·고금리에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마저 치솟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물가 때문에 회사원들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부담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여당의 무능함입니다. 무역적자를 비롯하여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도 정부는 안일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면서도 그 어떤 정책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기술 변화, 에너지·산업구조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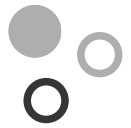
제1당의 유능함으로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8주에 걸쳐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등 민생 해결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3. 8.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환영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인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준비하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경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용불안이 겹치며 경제고통지수는 IMF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했고, 복합위기에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폭탄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2023년의 대한민국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2022년 상·하위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의 경제적 양극화를 기록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할 때입니다.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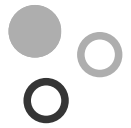
민생회복 연속 토론회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우리가 나서 책임지겠다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고견을 기탄없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과 입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민생중심의 유능한 정당, 원내 제1당으로서의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은행 빚, 들쭉이는 공공요금까지. 각종 민생위기 속에서 정책입법과제 모색을 위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긴급한 위기아래 시의적절한 토론회가 마련되어 반갑습니다.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님과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과제 추진을 위해 지혜를 빌려주실 발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경제상황에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요금이 폭등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6%를 기록하며 서민·중산층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난해 3분기 1,871조 원까지 늘어난 가계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금리에 서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마저 인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서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가 주요 경제지표는 어둡기만 합니다. 새해 첫 달부터 무역적자는 127억 달러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11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무역적자 장기화로 이제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것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지난해 설비투자와 생산력지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0.4% 역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경제 성장률도 0%대로 추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초대형 복합위기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각자도생 시대입니다. 경제위기 해결도 서민 보호도 뒷전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경제정당인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고금리 관련 대책 5건, 지역화폐 관련 2건, 부동산 관련 2건으로 이루어진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하여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형재세 도입을 통한 7.2조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으로 구체화하는 등,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면서도 층위가 다른 각각의 대책들이 입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진행되는 연속토론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살피는 해안이 모아질 희망합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위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옵니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가 민생위기 해결과 불평등 해소의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체적인 민생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 대상별 세부적인 정책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민생위기 극복’ 의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입법과제’를 제안하는 연속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태호 원장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경제실정이 고스란히 최악의 민생문제로 나타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물가폭탄, 이자폭탄, 실업(고용)폭탄, 전세폭탄 등 소위 ‘민생위기 4대 폭탄’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비, 전기요금, 등록금 등 물가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점점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민생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할 대책은 전무합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시장만능주의 논리만 내세우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각자도생 하라고 합니다.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 등 긴급한 주요 민생위기 극복 과제들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계 부채위험에 대한 한시적 조치 외에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및 상시적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 구제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대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확보와 자영업 생태계 변화 양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산업구조와 생태계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정교하면서도 즉각 실행 가능한 민생위기 극복 과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민생회복,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정책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민생과제들에 대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민생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과제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과제 그리고 법안마련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국회일정과 당무에도 불구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 김성한 정책위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속토론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을지키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함께 참여하고 계신 39분의 소속 국회의원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분들의 열정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3. 8.

민주연구원 원장 정태호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박주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는 8.8로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또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1,3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높아지며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장

이런 와중에 정부는 난방비, 전기요금 뿐만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마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중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까지 덮쳐 국민들의 한숨은 끝없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자유'라는 탈을 쓴 불평등, '능력'이란 탈을 쓴 차별의 합리화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보이던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단 한가지 기조는 오로지 '반노동', '노조 탄압'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에 나섭니다.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특고노동, 콘텐츠창작노동, 돌봄노동) 등 8가지 분야를 나눠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실정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회 분야별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시행하여 말로만

끝나는 토론회가 아닌 실제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의 씩크뱅크인 민주연구원이 힘을 합쳐 수요자 입장에서 더욱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님, 그리고 39분의 책임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토론과 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또한 을지로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생 정책을 만들고 입법화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8.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박주민

발제 1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 거시 경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 거시 경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 거시경제

2023.3.8.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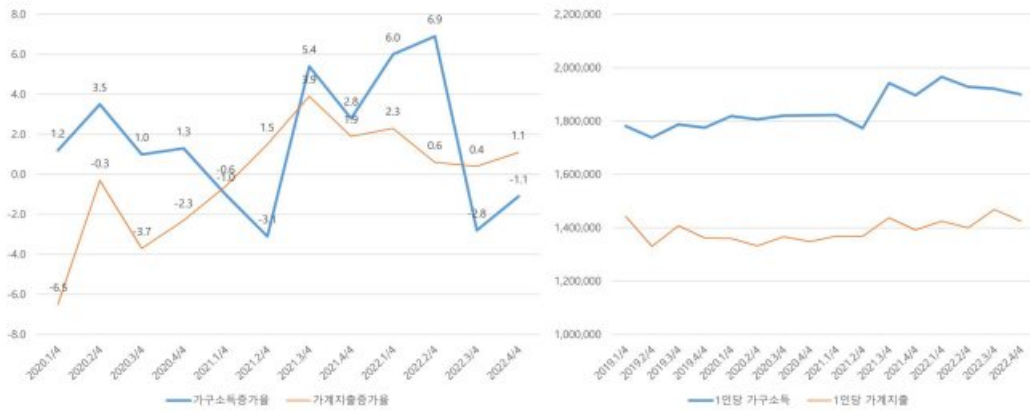
1.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2. 진단과 전망
3. 민생 대책의 모색

2

1.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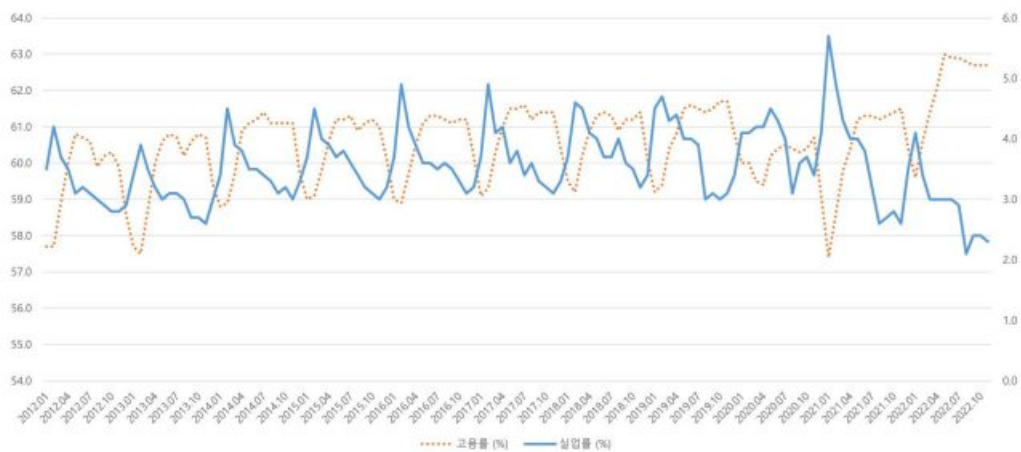
실질소득 증가율(좌) 및 수준(우) 추이 (2020년 기준) 물가가 오르면서 최근 실질소득 감소



자료: 통계청

4

고용률(좌축)과 실업률(우축) 추이



주: 15세 이상 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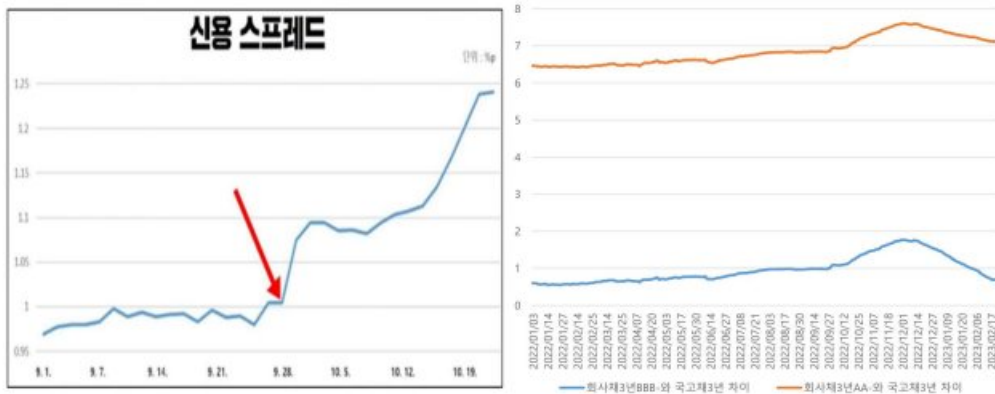
인플레이션과 대출금리 고물가는 고금리를 수반 - 부채축소 압력



주: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6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저신용 채무자의 유동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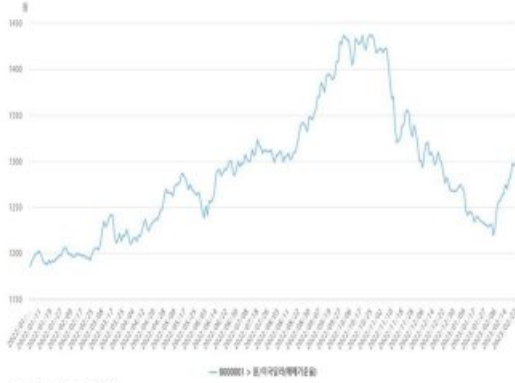


신용 스프레드 추이, 사진:김현규, 위임윤리브랩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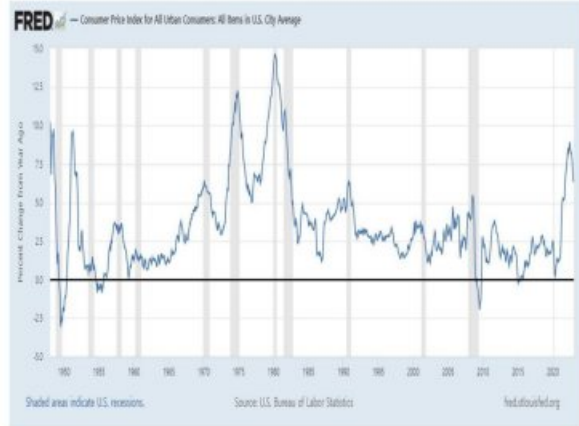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7

원/달러 환율(좌),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국 인플레이션-미국 금리상승-강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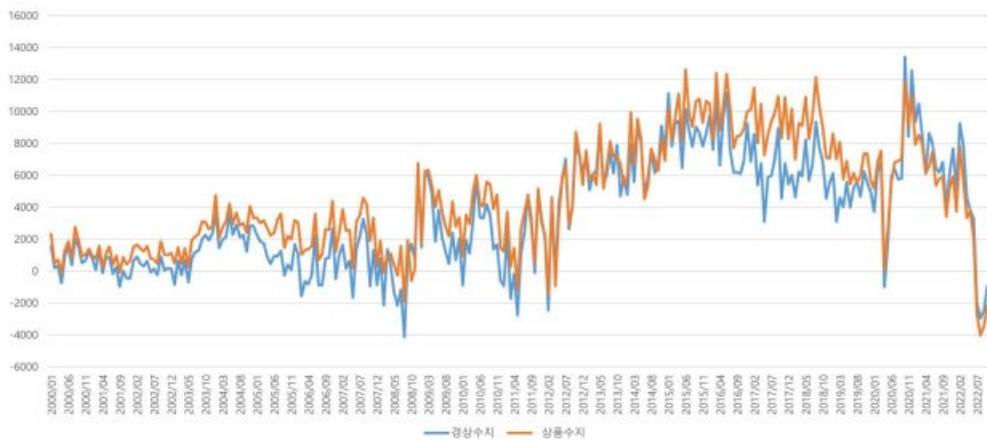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8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 추이 (백만달러, 계절조정)



자료: 한국은행

9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문제

- 고물가: 코로나 회복기 병목현상, 글로벌 공급충격, 에너지 문제, 일손 부족 등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Fed의 급속한 금리인상, 디레버리징 가속화 및 유동성 문제, 부채 후유증(Debt Overhang)
- 고환율: 미국의 강달러 여부에 크게 좌우. 대중국 수출, 반도체 경기 악화와 글로벌 에너지 문제로 인한 무역적자. 경상수지 악화. 통화정책 선택폭 축소

- 한전 적자 문제가 이 문제들을 단적으로 요약.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생산 비용 증가 → 물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요금 인상은 한계 → 한전 적자 증가 → 한전채권 발행 증가 → 회사채 시장 금리 상승. 동시에 에너지 소비로 인한 무역적자, 환율 상승
- 한전이 인플레이션 요인을 3%p 정도 흡수하는 대가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환율 상승 요인 발생. 한전채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금리 상승 요인 발생
- 더 이상 '미루기'와 '덮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 필요: 에너지 절약 대책 및 한전 관련 재정투입(+요금 인상시에는 보조금) - 이 경우 국채 발행 증가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세수 확충 대책 필요

10

2. 진단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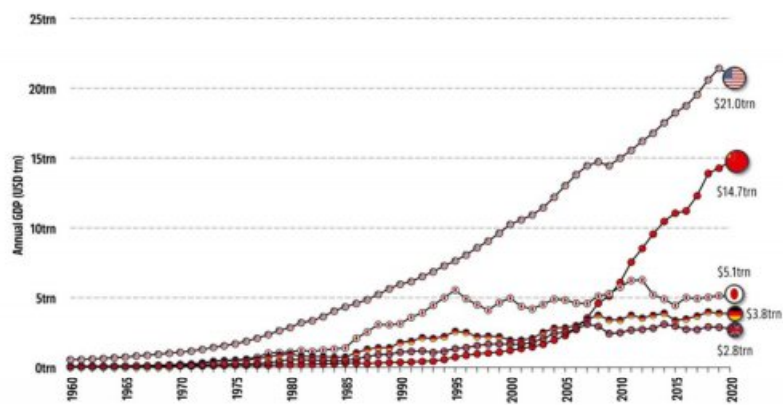
11

현재 문제의 핵심 연결고리는 인플레이션

- 세계경제의 변화: 세계화의 후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등 주요국의 거시정책 변화
→ 글로벌 인플레이션 → 고금리
-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가의 여부가 중요
- 연착륙 or 경착륙 or 스태그플레이션? Or 무착륙(No Landing)
- 미국 금리가 5%를 넘는 수준에서 1년 이상 지속된다면?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

12

세계경제 변화의 다이내믹스, 기술패권-정치패권의 기초: 주요국 GDP 추이



Source: World Bank, insightartist.com

13

기술패권의 안정성은 정치패권의 안정성, 세계화 흐름에도 영향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변동('18~'20)

자료: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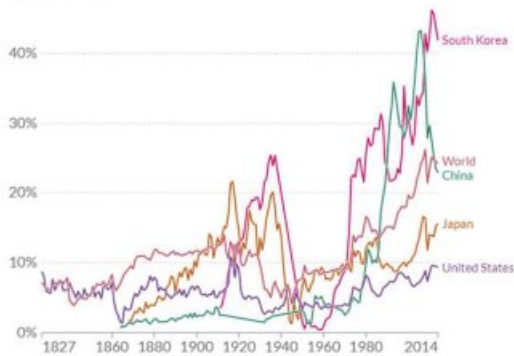
14

세계화의 흐름 – 후퇴기의 시작?

Value of exported goods as share of GDP, 1827 to 2014
Estimates correspond to merchandise export-to-GDP ratios.

Our World in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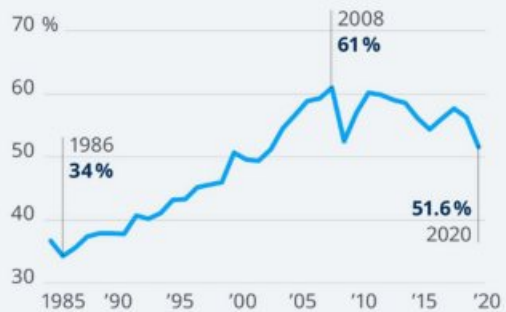
+ Add country



Source: Fouquin and Hugot (CEPII 2016)

OurWorldinData.org/trade-and-globalization • CC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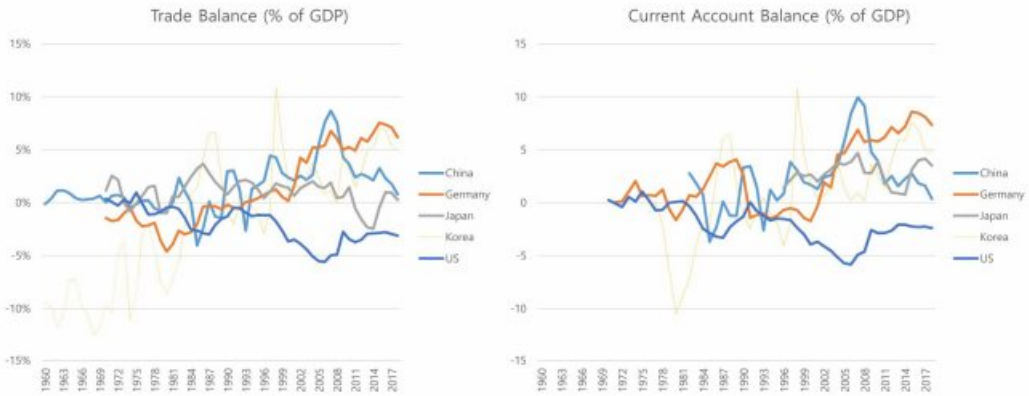
Global share of trade to GDP



Source: The World Bank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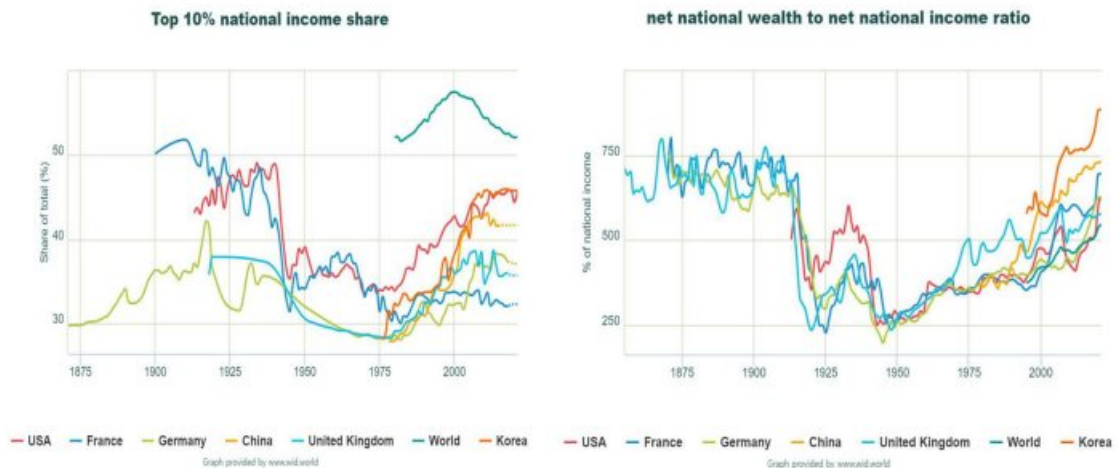
글로벌 불균형 -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Source: Gapminder database

16

심화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 세계화 & 금융화는 사회적 불안·갈등 없이 지속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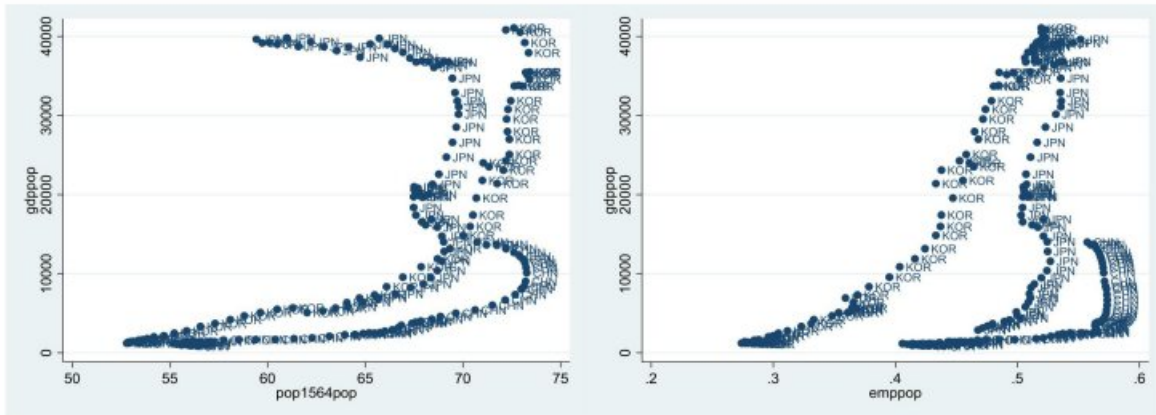


Graph provided by www.aid.world

Graph provided by www.aid.world

17

<참고> 15-64세 인구비중(x축,좌) 및 고용률(우)과 1인당 GDP(y축)
: 한국, 일본, 중국의 사례(1960-2019)



자료: World Bank, Penn World Table

세계경제의 대전환기, 변곡점

-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AI 등) → 정치패권 경쟁 → 세계화의 후퇴 → 공급망의 불안: 1990년대 이후의 대안정기(Great Moderation) 및 저물가 환경의 종식 - 물가불안 및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 증가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중갈등 심화 등을 매개로 리스크 표면화
- 러시아-중국과 서방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저렴한 자원 및 노동의 공급을 곤란하게 하고 '프렌드쇼어링' 등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
- 신기후체제의 형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상당 기간 그린인플레이션을 유발. 탄소국경세 등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경제의 전환기적 변화에 따라 정책기조도 적응해야 할 필요성

→ 특히 한국경제는 과거의 성장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

주요국 거시정책 기조의 변화 움직임

➢ **Great Policy Reversal**; The Economist 2022.10.8: "... a great policy reversal is under way in the rich world. The tight fiscal, loose monetary policy mix that defined much of the 2010s is being upended into a loose fiscal, tight monetary policy one."

- **긴축재정+완화적 통화정책 → 완화적 재정정책+통화긴축**(1980년의 긴축재정+긴축통화와 차이)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부자증세 추진, 재정적자 GDP 5% 수준 유지 추정
- 유럽연합: 8070억 유로 규모의 "Next Generation Fund" 블록내 연대성 강화
- 독일: 가스수입업체 Uniper 국유화, GDP 5.2% 수준의 "Economic Defense Shield"(에너지 보조금 포함), 재정준칙 우회
- 프랑스: 에너지 가격 통제, EDF 국유화
- 영국: 에너지 가격 캡 위해 GDP 6.5% 차입 & 감세계획 철회, 증세 추진
- 일본: 71.6조엔 규모 종합경제대책(가구당 45만원 에너지 보조), 아직까지는 저금리 유지
-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도입, 유럽 횡재세 도입, 감세-규제완화보다는 증세-정부역할 중시 경향

20

글로벌 거시정책 기조 변화 or 일시적 변화?

➢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를 벗어나려는 것인가?** 대안정기 이후 새로운 기조?

- Privatized Keynesianism - 통화정책 중심의 거시정책, 금융화, 양극화의 부작용 발생
- 이 흐름이 정통 케인지언 정책, 재정우위로 바뀌는 것인가?

➢ **금융화, 신자유주의 기조로 회귀하기 어려운 상황:**

- 1920년대 이후 최고에 달한 양극화 문제(소득, 자산, 부동산 등등) - Easy Money로 해결 곤란
- 밀레니얼 세대의 불만, 2009년까지 2.0 이상이던 미국 출산율이 2020년 1.78까지 하락한 위기상황
-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와 생산성 증가율 하락
- 기술전환, 기술패권-정치패권 경쟁(100년 전과 유사한 측면) - 주요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
- 탈세계화 및 GVC 재편 - 에너지 문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

21

미국 엘런 재무장관의 적극적 재정정책

▶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 전략

- 재정으로 총수요 확대 - 일정 정도 인플레이션과 명목금리 상승 용인 - 실질금리는 비교적 낮게 유지
- Summers 등: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지적(부채주도 성장-자산가격 상승, 목표저축액 상승-소비위축, 좀비기업 퇴출 곤란-기업생태계 역동성 저하)
- 유동성함정 회피, 경제 선순환 추구
- 기술패권 경쟁 등 당면 과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 현대공급측경제학: 인플레이션 발생 후에도 적극 재정 기조 유지

- 인플레이션을 맞아 최근 바이든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를 현대공급측경제학(Modern Supply-Side Economics)으로 설정하는 등 강조점을 수요에서 공급으로 이동
- 1980년대의 감세-규제완화 중심의 구식(Old) 공급측경제학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공급확대 정책(노동공급,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중시
- 프렌드쇼어링으로 적극적 공급망 재편 추진, 산업정책 요소 강화
-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재정지출 축소가 아닌 부자증세 및 금리인상 등으로 대처

22

인플레이션의 미래에 대한 두 주장

▶ Krugman: 저물가-저금리로의 회귀 가능성(구조적 장기침체론과 일맥상통)

- 투자수요 정체 요인(인구 정체 및 기술혁신 정체)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대로임
-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시기 정부의 막대한 지출에 수반된 것.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

▶ Spence: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구조적 장기인플레이션론)

- 과거처럼 신흥국이 저비용 생산요소를 탄력적으로 공급하며 저물가를 수출하던 시대는 종식
- 신흥국 인구 수천 만명이 새로 중산층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
- 인구 고령화로 노동공급은 감소 but 상응하는 수요 감소는 없음
- 미국의 건강 및 교육 서비스 부문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이 노동력 부족 야기 - 향후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 불가피
-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프렌드쇼어링: 비용 효율성보다는 안정성 추구 - 고비용 불가피
- 산업의 독과점 심화: 고물가가 공급확대 유발하는 힘 약화, 비용상승을 가격상승으로 전가
- 클린에너지 전환은 장기간 막대한 정부부채 증가 요인 -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 광범위한 기술혁신, 특히 디지털, 바이오 기술혁신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것이나 장기간 소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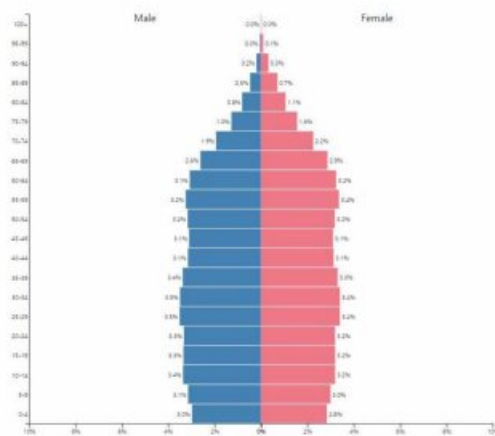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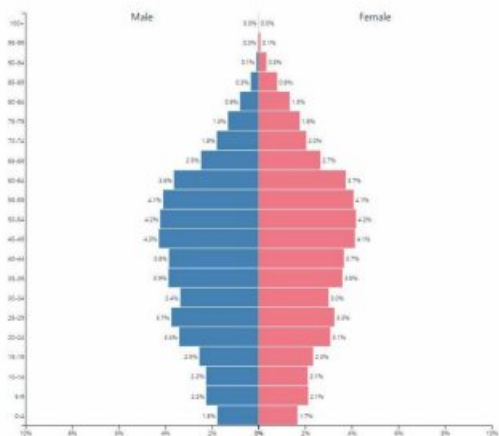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인구구조

Republic of Korea ▼
2020

Population: 51,844,690

United States of America ▼
2020

Population: 335,942,003



3. 민생 대책의 모색

부채 후유증, 실질소득 감소에 대응

- 단기적으로는 디레버리징에 따른 부채 후유증(Debt Overhang) 문제 해결 필요
- 디레버리징은 빚 갚는 속도를 높여 유동성 문제(흑자도산 등) 야기
- 소비 및 투자 부진 등 거시경제 위축 우려
- 과거보다 높은 금리에서라도 괜찮은 담보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여 금융접근성 보장 - **유동성 위기 방지**
- 코로나로 인해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 한계채무자,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 - 정부의 **적절한 조정** 역할 필요

- 부채 후유증으로 거시경제 위축 시 **적극재정으로 보완**
-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거시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등 고려**(다양한 방식 가능,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면서도 소득 감소 부작용 방지)
- 정부의 빚 문제는 민간부채 문제를 해결한 후 해결하는 것이 순서, **상생연대를 위한 세수확보** 방안도 모색

26

전환기 민생안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전환기에 적극 대응: 성장잠재력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과거 방식만을 답습하면 성장정체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
- 지식 기술을 동력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 '정의로운 전환' '동반성장'
- 탈탄소 전환(무역장벽 극복), 디지털 전환은 세계적 추세
- 패자를 보듬는 '정의로운 전환' 없으면 전환 불가: **중소기업 전환,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 **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 등 문제 해결
- 기술과 교육의 경주(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에서 교육이 뒤처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평등 완화: **지식 기술의 확산 Spillover** 촉진
- 아울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 **부동산, 주거불안 문제 해결, 돌봄문제 해결**
- 지식, 기술혁신 중심의 새로운 성장체제에 맞는 추진체계 정립 → **황금의 삼각형: 정부-시장-시민사회**
- 거시경제정책 기초: 과거의 금융화-Privatized Keynesianism을 극복하고 적극 재정 활용
- 스마트한 적극 재정: Crowding in effect, 현대공급측경제학, 산업정책 경쟁 앞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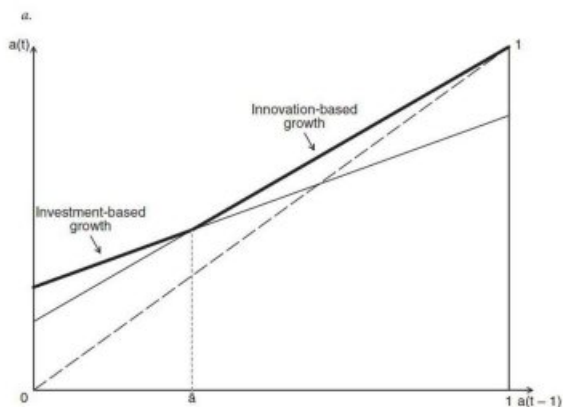
27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저성장의 원인이 무엇일까? 과거 성공, 기득권의 함정, 지대추구
- '민간주도 vs. 정부주도'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비전 제시가 어려워짐
- 혁신을 위한 시장구조, 기업생태계(상생 수단?), 잠재적 혁신자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등 필요
- 전환기의 새로운 기회를 기존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으로 차지하기보다 상생생태계 육성
- 임무지향성 필요, but 단기성과 중심의 '민간주도'와 결합하면? 조속한 임무성과 창출을 위한 대기업 밀어주기가 될 수도 → 지속가능 생태계 관점의 운용 필요
- 주요국 신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인 '지속가능성'(탈탄소 등) 측면 충분히 고려
- 이때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포용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 정의로운 전환
-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이 키워드: 성장의 핵심은 기술과 사람, 저출산도 이런 관점에서

28

경로 전환(좌)과 성장정체(우)



출처: Aghion 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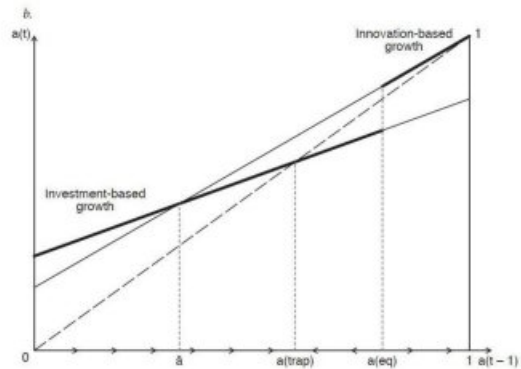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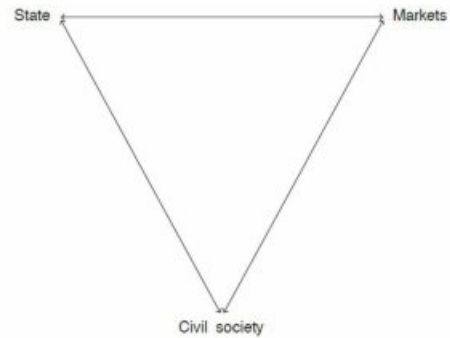


FIGURE 7.9. Distance from the frontier and growth. a. Growth-maximizing strategy. b. Trap.

Reformatted from D. Acemoglu, P. Aghion, and F. Zilibotti, "Distance to Frontier, Selec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4, no. 1 (2006): 37-74, figure 2, 3.

추진체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 ‘민간주도-정부 뒷받침’ vs. ‘정부주도-민간 추종’이라는 과거 프레임을 Aghion (2021) 등 최신 성장론에서 강조하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황금의 삼각형’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
- Mazzucato 등: 혁신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민간주도 - 정부는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과거 틀에 한정시키기보다 **공공투자의 가치 창출 효과**에 주목할 필요(인터넷, GPS 등 정부투자로 만든 기술 사례 참조. 공공부문은 “investor of first resort, not just lender of last resort,”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crowding-in effect**” 등)
-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의 담합을 막고, 시장규율이나 규제규율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율규제를 가능케 함



출처: Aghion 등 (2021)

30

기업생태계: 경쟁과 혁신, 선도기업과 비선도기업

프론티어 기업은 경쟁이 혁신 유발, 비프론티어 기업은 출혈경쟁이 혁신 저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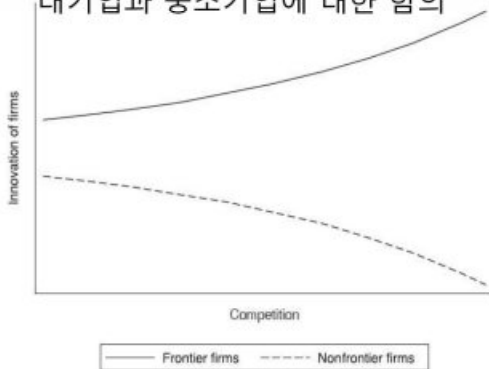


FIGURE 4.2. Intensity of competition and innovation, as a function of distance to the technological frontier. Note: The upper curve corresponds to the average of firms closer to the technological frontier than the median firm. The lower curve corresponds to the average of firms that are farther from the technological frontier than the median firm.

Reformatted from P. Aghion, *Repenser la croissance économique* (Paris: Fayard, 2019), figure 3.

출처: Aghion 등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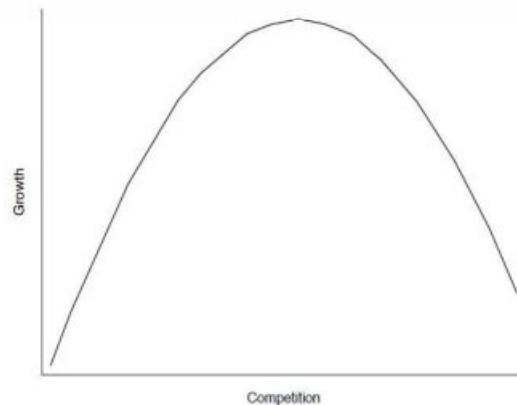


FIGURE 4.3. Effect of competition on innovation and growth.

Data source: P. Aghion, N. Bloom, R. Blandel, R. Griffith, and P. Howitt, “Competition and Innovation: An Inverted-U Relationship,”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no. 2 (2005): 701–728.

31

혁신기업이 기득권이 됐을 때: 로비 담합 늘리면 혁신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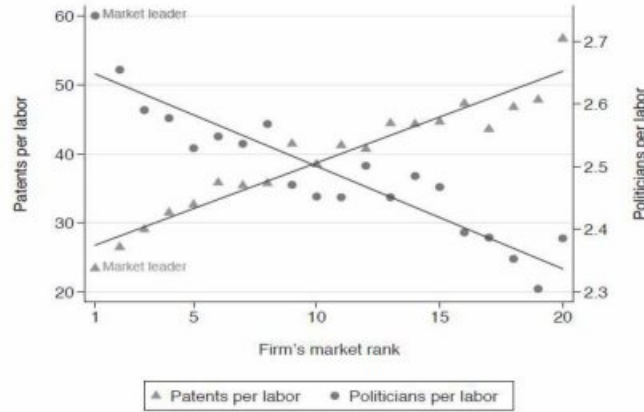


FIGURE 5.13. Market share, innovation, and political connection.
 Reformatted from U. Akcigit, S. Baslandze, and F. Lotti, "Connecting to Power: Political Connections, Innovation, and Firm Dynamics" (NBER Working Paper No. 2513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October 2018), figure 5.

출처: Aghion 등 (2021)

32

바람직한 거시정책 기조

➢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전환기에 맞는 정책기조 모색

지금까지의 기조	바람직한 방향
대외 의존 신중상주의, 수출주도 대기업 의존 (선택적) 재정보수주의	진정한 국부는 지식·기술·사람, 상생의 기업생태계 추구 재정의 적절한 역할: 공공재 투자 + 안전망 +...
Privatized 케인스주의: 통화정책에 미루기 금융화(특히 부동산의 금융화)	케인스+슈페터: 적극재정, 수요와 공급능력 모두 중시 생산적 금융 + 포용적 금융

-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공급망, 기술전환 산업정책, 돌봄 교육 등 공적 기능 필요)
- 과거 방식의 성장은 더 이상 쉽지 않을 수 있음
-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가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와 거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달성 가능
- 포용성, 지속가능성이 시대적 화두 →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성장체제 필요

33

발제 2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 국제 경제(산업 & 통상)**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 국제 경제(산업 & 통상)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생 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 국제 경제(산업 & 통상)

최지은

2023. 3. 8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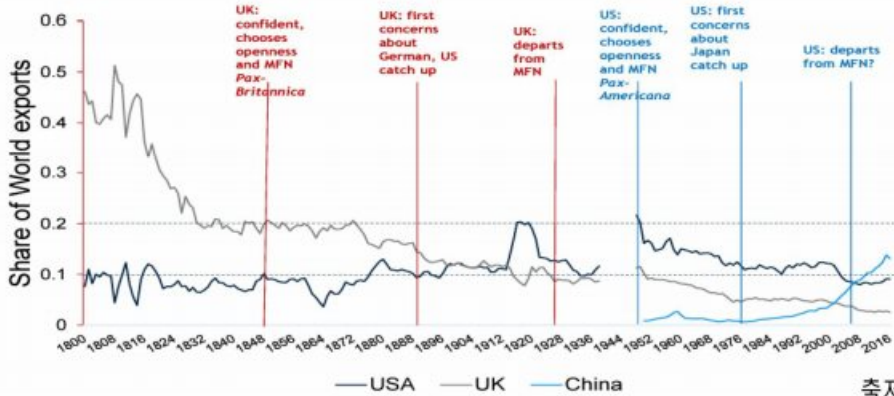
- 파편화
- 신통상
- 기술

세계 경제 파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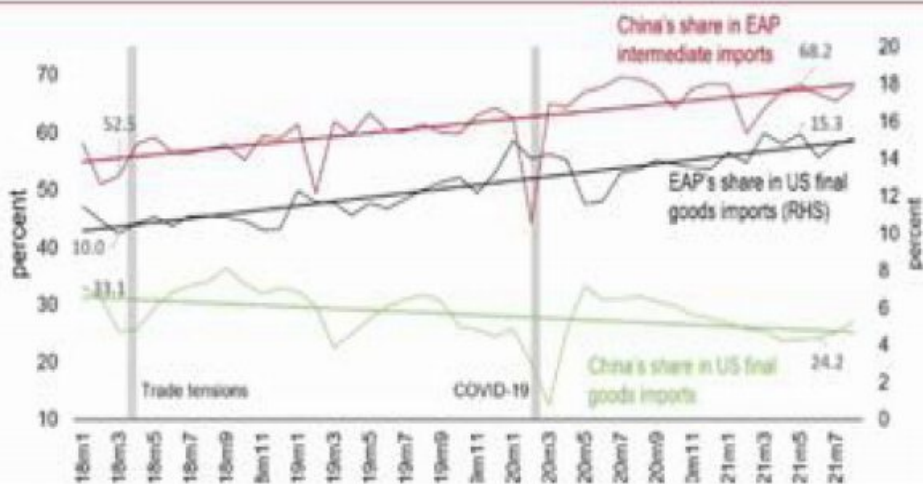
세계화 반대 흐름 지속 예상

- 코로나 전, 세계 무역 감소 추세
- 서비스, 원자재 무역 감소 없음.
- 제조업 (특히 가치사슬 수직적 다단계 상품) 무역 감소
- 코로나 + 러-우 전쟁으로 더욱 분절
- 미국 무역 정책 기조 대선까지 유지 예상 (노동자 중심, 중국 견제, 자국 우선주의)

미국과 영국이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1800-2016



동아시아 지역 가치 사슬의 변화



- 미국의 중국 제재 후 미국의 수입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
- 동아시아 지역의 중간재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유지

파편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 다자 주의 수혜국
 - WTO 식물 기구화, 기존 통상 질서 파괴는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에 악영향
 - 국제 공조 파편화는 공통 해법 마련 장애물. 경제 회복 지연
- 수요 측면 (케인즈)
 - 세계 수입 감소는 각 국의 수출 기회 축소
 - 그러나 수출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탄력성은 유지
- 공급 측면 (스미스)
 - 무역 축소는 전문화와 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성장 축소
 - 가시 사슬 축소는 국제 노동 분업과 지식 전수를 통한 성장 축소
 - 그러나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음

한국 무역 적자

- 2022년 무역적자 규모 역대 최대치
 - 반도체 수출 급감
 -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 급감
 - 에너지값 급등으로 수입 증가

정책 고려 사항

- 한미 동맹 진화: 경제, 문화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동등한 파트너십.
 - 전략 산업(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안정화 문제 주력
 - 반도체 생산국이자 기술 보유국인 한국은 대미 협상 레버리지 활용해야
- 대중 관계 신중한 접근
 - 한국과 중국을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
 - 수출 비중 및 리스크 관리 필요.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 등의 협력 필요
- 예외 조항 구체화 노력
 - 주요국 기존 통상 협정의 예외 조항(예. 국가 안보 조약) 남용
 - 예외 조항 구체화 위해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와 연대 필요
- Rule-based 통상 질서 부작동 고려 양자 협의에 방점되어야

정책 고려 사항

- 수입처 다변화
 - 수입 품목의 약 15% 중국 의존율 80% 이상
 - 요소수, 마그네슘과 같은 핵심 원료도 포함 (KITA 2021)
 - 경제안보 200대 품목 관리 등 수출 다변화 위한 정책 지원
 - 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 고려
- 경제안보 범위 확대
 - 현 경제안보는 주요 품목 공급 관리 위주
 - 핵심 신흥 기술 포괄 필요

신통상 이슈의 대두

무역 협정의 변화

- 무역 협정 숫자와 참여국 지속적 증가
 - 각 국은 평균 14개의 협정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협정 협상 중
- 관세는 농업을 제외한 전분야에서 하락했음
 - 전 세계 66% 이상 국가 관세 5% 미만 (상품의 무역 비중 고려)
 - 추가 관세 하락 영향력 미미
- 비관세 장벽이 더 큰 영향

더 많은 규정 포괄 (Deep agreement)

	No of areas covered in the agreement		
	<10	10-20	>20
Tariffs on manufacturing goods	✓	✓	✓
Tariffs on agricultural goods	✓	✓	✓
Export taxes	✓	✓	✓
Customs	✓	✓	✓
Competition policy	✗	✓	✓
State aid	✗	✓	✓
Anti-dumping	✗	✓	✓
Countervailing measures	✗	✓	✓
TRIPS	✗	✓	✓
STE	✗	✓	✓
TBT	✗	✓	✓
GATS	✗	✓	✓
SPS	✗	✓	✓
Movement of capital	✗	✓	✓
Public procurement	✗	✗	✓
IPR	✗	✗	✓
Investment	✗	✗	✓
Environmental laws	✗	✗	✓
Labor market regulations	✗	✗	✓
TRIMS	✗	✗	✓

기존 관세 위주 협정

- + 디지털 통상
- + 기후
- + 노동
- + 공정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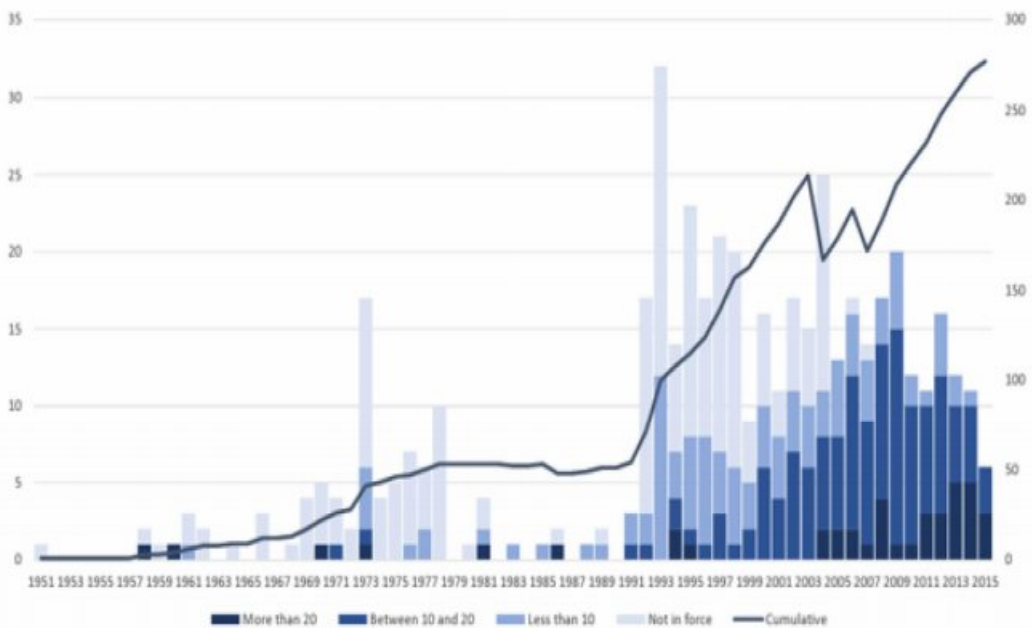
+ 경제안보: 기술 유출 방지, 전략 물자 수출관리, 기술 탈취 해외투자 규제

+ 기술표준: 지정학/전략 차원화

+ 탄소중립조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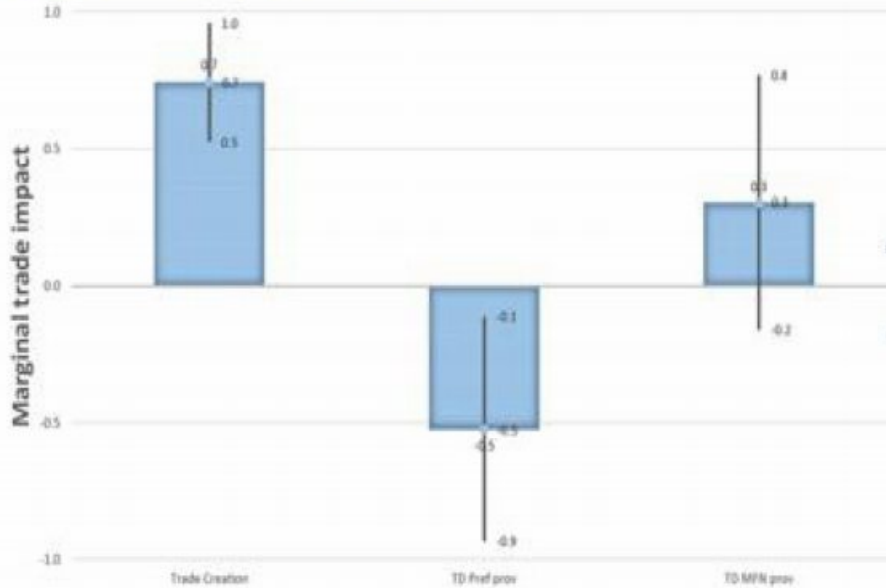
...

Deep agreement가 통상 협정의 추세



Source: Hofmann, Osnago and Ruta (2017)

Deep agreement 동참 vs 불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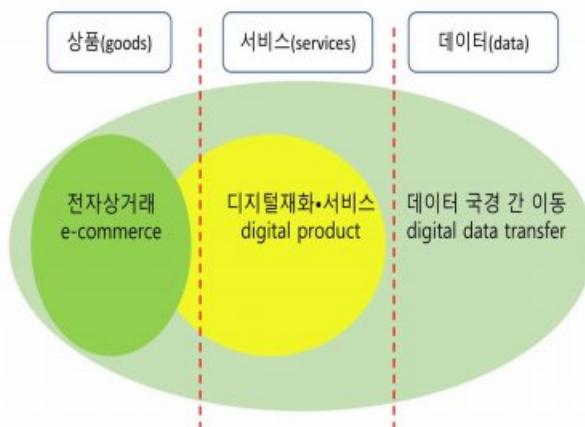


Source: Mattoo, Mulabdic and Ruta (2016),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Deep Agreements."

예 - 디지털 통상

전자적 수단으로 국경을 넘어 전송되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 및 데이터 이동

- (전자상거래) 물리적 상품을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거래
- (디지털재화·서비스)인터넷으로 전송, 판매가 가능한 시청각 스트리밍(영화, 음원 등)
- (데이터 국경 간 이동) 비즈니스나 기타 행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셜미디어, 포털 등을 통해 국경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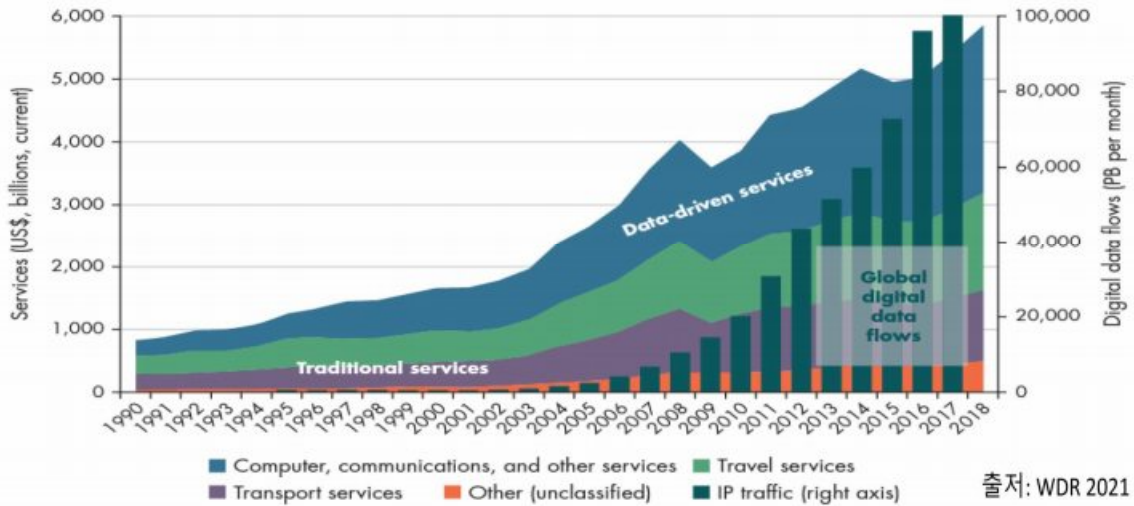


상품	amazon, ebay, Alibaba.com
데이터 국경 간 이동	디지털재화 서비스 YouTube, NETFLIX, hulu
데이터	facebook, twitter, iCloud

데이터 21세기 석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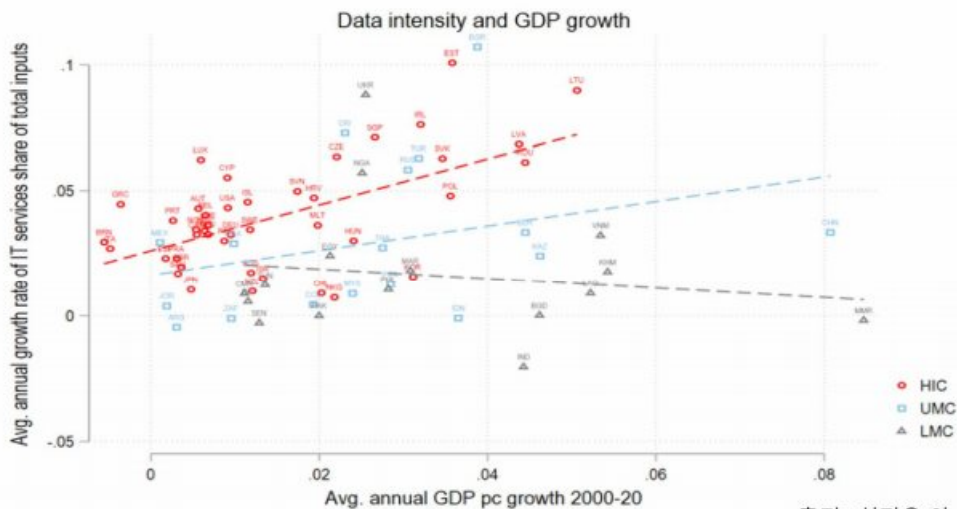
- 디지털 경제는 수치화가 힘들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데이터 부재
- 디지털 무역을 포함하면 세계화는 확대 중

데이터 기반 서비스 무역의 가파른 성장, 1990~2018



한국 데이터 경제 규모 상대적으로 미흡

- 한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대비 디지털 규제 제약 많음 (OECD DSTRI 기준)
- 한-싱 DTA외 디지털 통상 협정 없으며 기존 협정내 디지털 조약은 의무 조항 아님



예 - 표준

- 표준이 지정학적 경쟁 전략의 축으로 부상
 - 미-중 갈등으로 국제표준 탈 동조화 우려
 - 경제, 안보, 외교 등과 복합적으로 표준 정책 접근 필요

- 미국 : 표준을 기술 패권의 도구화
 - “표준은 기술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데 중요하고, 미국의 안보와 경쟁력에 핵심” (미중관계 과학 기술 분야 실무 그룹, 2020)
 - AI 분야 미국 리더십, 기술 표준 및 관련 도구 개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참여 계획, 행정 명령 13859호 대응 보고서 (NIST, 2019)
 - EU-미국 무역 기술 위원회 (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중국 표준 2035

- 디지털 일대일로
- 표준 채택자 (follower) → 설정자 (standards-setter)
- 2022 국제표준화 : 농촌재생, 제조/서비스업, 사회거버넌스구조, 정부-시장 협력
- 민간기술과 군기술 상호 응용
- 디지털전환 준비
 - 글로벌 네트워크, 표준, 플랫폼 통제 목표
 - 인터넷 플러스: 온라인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 기존 산업
 - AI, 디지털 위안화, 감시기술
 -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 AI 표준



정책 고려 사항 - 신통상 전략

- 한국 무역협정 포화상태
 - 세계 GDP의 80% 국가들과 다자, 양자 무역협정 (59개국, 21건 FTA)
 - 추가 관세 인하 큰 의미 없는 수준
- 신통상 분야 수세적
 - 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시 4개 영역 모두 수세적.
 - 공세적 분야 협상 활용 필요 (예. 신재생 에너지 수출, 탄소저감국외감축법 등)
- 기존 협상 업그레이드하는 신통상 전략과 준비 절실
- 무역 구제 농업, 제조업 중심에서 신통상 이슈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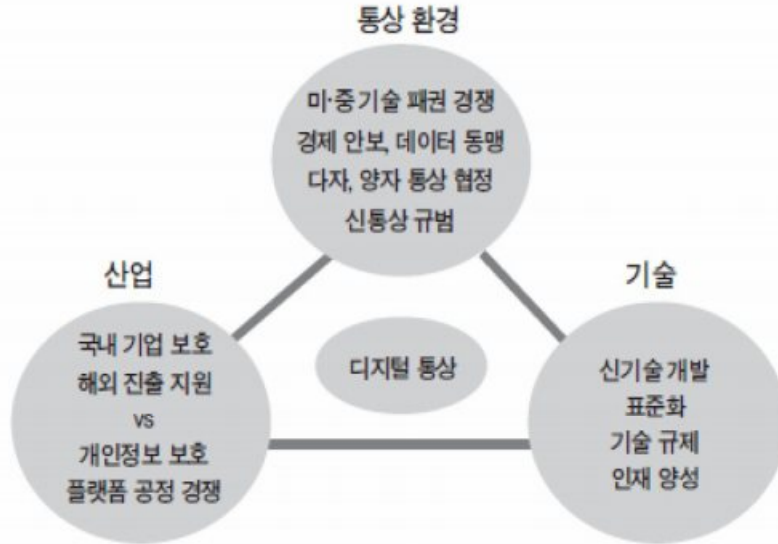
정책 고려 사항

- 디지털 통상 파편화: 미국/중국/중간국 규제 관심 차 (예.민주주의, 인권)
- 데이터 보호형 정책(safeguards)과 개방형 정책 (Enabler) 양자 택일 문제 아님
- 규제 유사국간 무역 증가 → 한국에 유리한 국가와 데이터 교역 협정 고려 (싱가포르의 예)

	ln(Exports)		
	(1)	(2)	(3)
Dissimilarity (full)	-1.286** (0.348)		
Dissimilarity (enabler)		-0.886** (0.265)	
Dissimilarity (safeguard)			-0.662** (0.179)
ln(distance)	-0.638*** (0.065)	-0.640*** (0.065)	-0.642*** (0.064)
Observation	25,280	25,280	25,280
R-squared	0.678	0.677	0.677
Exporter dummy	YES	YES	YES
Importer dummy	YES	YES	YES
Sector dummy	YES	YES	YES

출처: 이규엽, KIEP 2023

정책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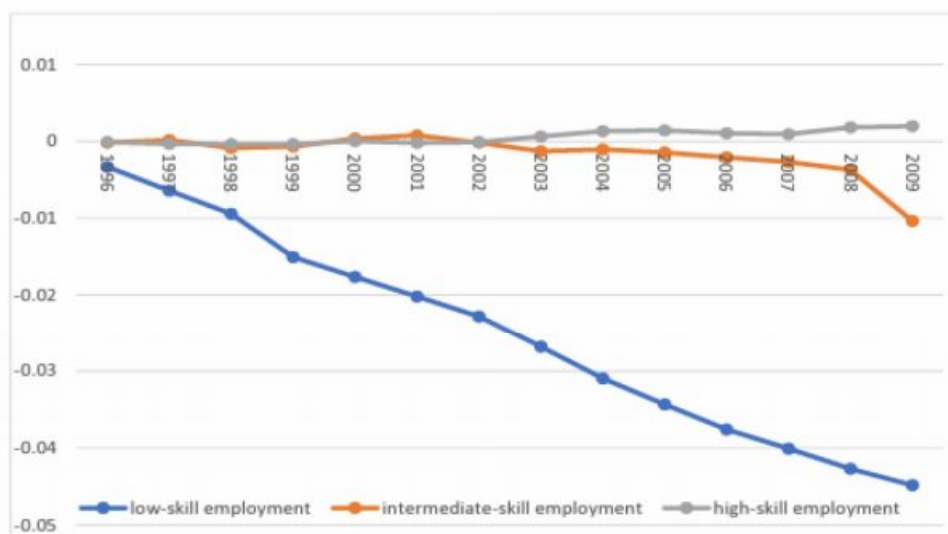
정책 고려 사항

- 디지털 산업/무역 촉진 목표로 국내 기업 디지털 무역 애로요인 해소 위한 협정 접근
- 협상상대국 선정 기준 : 수출 확대 가능성, 성장 잠재성, 규제 이질성
- 국내 규제의 정합성 유지와 제도 정비와 연계
 - 현안 - 망 사용료, 인앱 결제, 데이터 현지화
 - 중기 - AI 윤리/거버넌스, Chat GPT 등 신기술
- 특정 분야 한국이 통상 규범 제시하는 리더십 발휘
 - 예. AI 거버넌스
- 표준 설정 참여
 - 신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경쟁 치열 - AI, 스마트시티 등
 - 미·중 이외의 국가 및 지역 연합과 연대 및 규칙 제정 참여 노력해야

기술과 고용, 양극화

기술, 산업구조, 노동수요

선진국 40개국의 제조업에서 노동 숙련도별 노동 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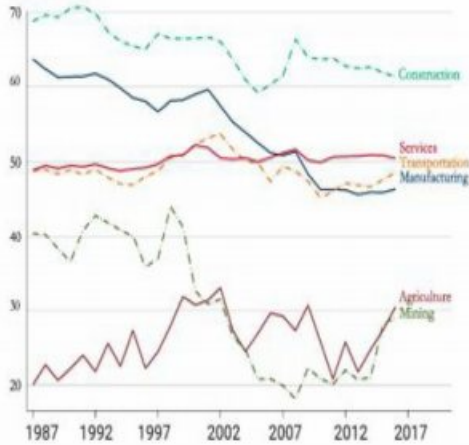


출처: Rodrik 2016

제조업 중심 산업화 모델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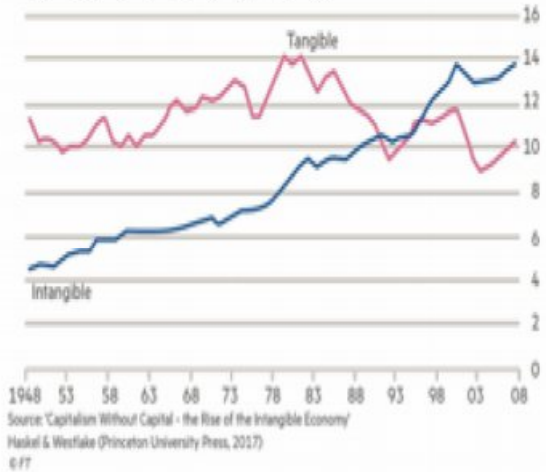
- 고소득 국가 : 제조업노동 부가가치 비중 하락하는 동시 무형자산 급속히 성장
- 중위소득 국가 : 제조업에서 노동 고용 급격히 감소
- 저소득 국가 :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기대 힘들 (Rodrik, 2021)

미국 산업별 노동의 부가가치 비중, 1987-2017



Source: Acemoglu and Restrepo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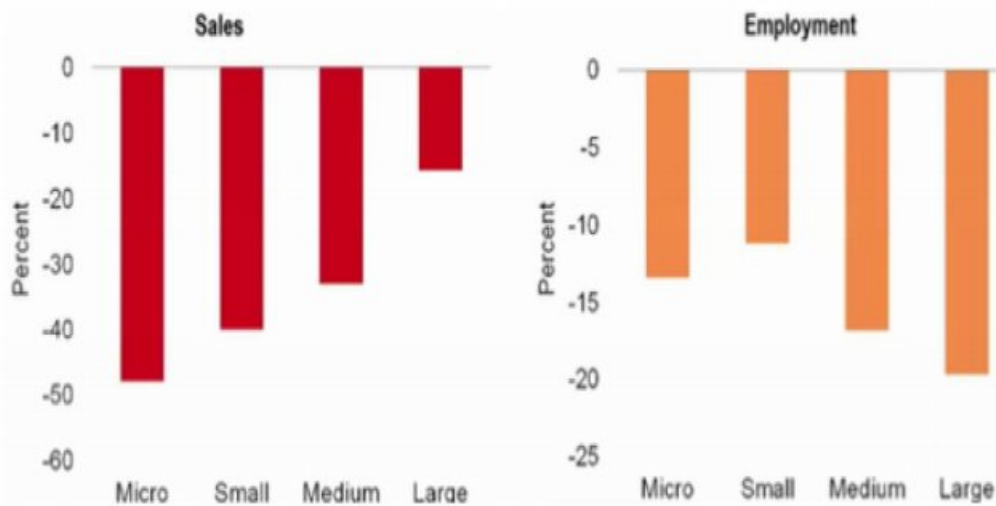
미국 전체 부가가치에서 투자 비중



Source: 'Capitalism Without Capital - the Rise of the Intangible Economy' Haskel & Westlak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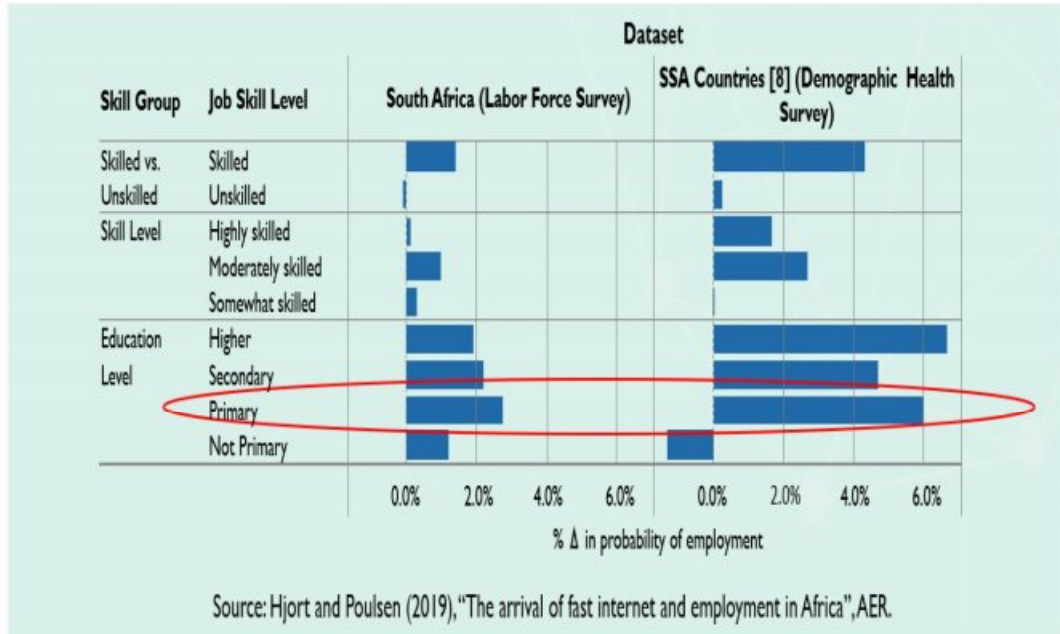
팬더믹 기간동안 디지털화 심화는 양극화 심화로 연결

세계적으로 중, 소 기업의 매출 감소 vs 대기업의 고용 감소



출처: World Bank, Using Business Pulse Survey, 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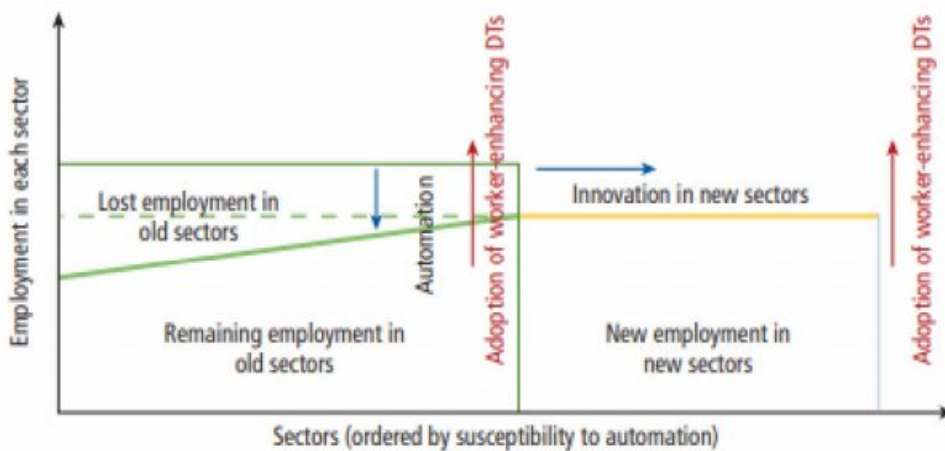
저소득, 저숙련 노동자에게 긍정적 역할 사례



정책 고려 사항 - 고용

기술은 고용에 중립적

→ 기술이 노동 대체가 아닌 보완적으로 사용되게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



출처: 최지은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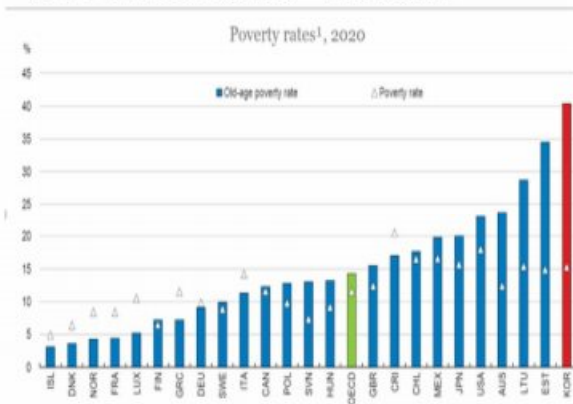
정책 고려 사항 - 생산성

- 한국 경제의 퍼즐
 - 한국인 교육 수준, 1인당 R&D 투자액, ICT 인프라 세계 최고
 - 노동 생산성 OECD국가 평균 미만, 특히 서비스 분야, 소규모 기업 생산성 낮음
 - 팬데믹 기간 동안 생산성 성장률 더욱 : 노동 생산성 성장률 5.4% → 1.4%,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 3.2% → 0.6%, 2020-2022 (한국은행 2023.1월)
- 생산성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
 - 디지털 통상 협정, 국경간 데이터 이동 조약 등 데이터 집약도 높은 산업 성장 및 무역 촉진할 것
 - 데이터 저장 (데이터 댐) → 데이터 활용 (데이터 강)으로 변화 모색
 - 플랫폼과 이용자 관계에 대한 정책 토론 적절. 추가로 신규 플랫폼 시장 진입 관련 정책도 논의되어야

정책 고려 사항 -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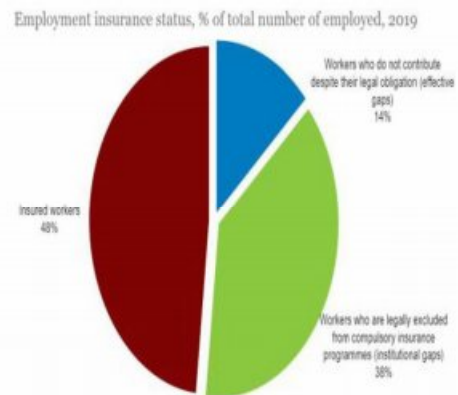
- 저소득 계층, 노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지원 및 이를 통한 경제 활동 지원
-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 보험 및 회사 지원 부족, 고용 보험 없음.
-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 안정망 강화 절실

한국의 빈곤율 OECD 상위권, 노인 빈곤율 1위



1. The poverty rate is the share of the number of people living with less than half of the median disposable income. Wealth, which increases consumption possibilities and is typically higher among older generations, is not reflected. Source: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 고용 보험 없음



OECD calculations based on Jung E. (2020) and Jung H. (2021).

정책 고려 사항 - 세계 경제 되감기

- 2023년 세계 경제 억눌린 회복 예상
 - IMF 2.7 → 2.9%로 전망치 상향했으나 동 기간 역사적 평균 3.8% 대비 저조 (고금리, 전쟁 영향)
 - 세계 인플레이션 2023년 6.6%, 2024년 4.3% 전제하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음
- 위험 요인 :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세계 중앙은행 금리 추가 인상 &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 통화 정책 딜레마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의 압박 vs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 고금리 유지 및 상승 지속시 민간 부채 부담 실물 전이 우려 (역자산 효과, 개인 및 한계 기업 파산 리스크, 금융 경색 우려)
- 재정 역할 딜레마 : 경기 침체 막기 위해 재정 풀어야 vs 국가 부채, 물가 관리 위해 재정 줄여야
 - 각 국의 부채 수준 고려 및 재정 여력 제약
 - 정책의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
- 한국 경제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 대내외 수요 감소 & 부동산 경기 침체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
- 선택적, 일시적, 포용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 (예: 취약 계층 에너지 보조금 등)

전망과 대응

위기	파편화	신통상	기술
전망	세계화 → 파편화 규칙 기반 → 각 국의 힘에 기반 다자주의 → 양자 및 동맹 중심	재화/서비스 → 디지털/데이터 관세 협정 → 비관세 + 조약 확대 표준은 기술 패권의 도구 경제/외교/통상/안보/기술 영역 모호	제조업 중심 산업화 모델 붕괴 기술이 노동 대체 (선진국, 중진국 비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심화) 양극화
대응	한미 동맹 안보위주 → 경제 및 공급망 포괄한 파트너십 중국 관계 여전히 중요 양자택일 → 전략적 모호성 + 다변화 경제안보 주요품목 공급망 관리 → 기술 포괄	통상규범/국제 표준 채택자 → 특정 분야에서 선도자 노력 통상 정책 양자택일 → 통합과 연대 수세적 통상 전략 → 전략적 분야에는 공세적	기술이 긍정적 결과 가져오는 정책 인센티브 필요 - 생산성 향상 - 노동 대체 → 노동 보완 - 양극화 완화 (예.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 안정망, 취약계층 기술을 활용한 경제 활동 지원)
선택적, 일시적, 포용적 재정 정책 & 전략적, 유연한 대외 정책			

토론 1

민생위기 극복 윤정부 정책의 문제와 과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민생위기 극복 윤정부 정책의 문제와 과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변호사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1차(총론) 토론문

민생위기 극복 윤정부 정책의 문제와 과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2023. 3. 8.

목 차

- 3고에 취약한 경제적약자 산업재편으로 복합위기
-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책대
- 규제완화 VS. 노동 등 경제적약자 보호
- 수출로 돌파 VS. 내수 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
- 빚내서 경기부양 VS. 가계부채 축소와 채무조정

2

1. 3고에 취약한 경제적 약자 산업재편으로 복합위기

1. 고물가

- 1) 실질임금 감소로 비정규직, 플랫폼종사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 가중
→ 이들의 임금 등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통한 거래조건 개선 제도 필요
- 2) 소비위축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자영업자
→ 지역상권 활성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과 점주 등에게 부담 전가하는 본사의 불공정 차단 대책
- 3) 난방비, 전기료, 통신비, 교통비, 이자부담 등 가계부담 증가로 생활고 겪는 가계와 자영업자
→ 적어도 정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물가” 시장자율만 아니라 지원과 관리대책 필요

2. 고금리

- 1) 코로나 위기 시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 이자부담 증가로 1/3 폐업 생각할 정도로 위기상황
→ 더 빚내서 버티기 보다 과중채무 신속한 채무조정과 이와 연계한 재기지원 지원행정 필요
- 2) 고리사채 또는 3개 이상 금융기관 이용 채무자 등 정상변제 어려운 300만 한계채무자
→ 파업·회생 등 지원하고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 지원

3

I. 3고에 취약한 경제적 약자 산업재편으로 복합위기

3. 고환율, 원자재가격 상승

- 1) 원자재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정유업체, 철강업체 등 영업이익 증대
→철강, 석유화학(플라스틱) 등 재료 독과점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인상 등 지위남용 규제
- 2) 자동차, 조선, 전자 대기업 소재·부품 납품대금 인상하지 않아 소부장 중소기업 위기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있게 실현되도록 행정감독 강화 필요

4. 급속한 플랫폼 경제의 전환과 소상공인의 위기

- 1) 과도한 수수료(중개+ 배달+ 결제+ 광고+ 물류...)와 노출순위(랭킹) 조작 등 불공정 거래
- 2) 중개→직접판매(예 : 카카오T→블루) 로 진화 : 자사서비스 우대 등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5.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재편에 따른 위기

예) 전기차 전환 : 내연기관 부품업체 10.5만, 정비업체 20만 종사자 생존위기

4

II.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책대 정책

1. 전세계적인 재정책장을 통한 민생위기 대책

1. 팬데믹 기간(2019 1분기~2022 1분기) 동안 OECD 주요국 확장재정으로 대응

예) 일본 21.9%, 미국 13.4%, 이탈리아 13.5%, 영국 9.5% 등 그러나 한국은 7.9%

2. 한국은 재정 대신 이를 가계부채로 대응하여 10.4% 증가로 가장 크게 증가

예) 미국1.9%, 일본 6.2%, 영국 1.1%, 이탈리아 2% 등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초과

팬데믹 기간중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 증가와 가계 부채 비율 증가 (%)
(2019년 1분기~2022년 1분기)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GDP대비 정부 부채 비율	117	238	118	161	126	47.2
팬데믹 기간 늘어난 정부 부채 비율	13.4%	21.9%	9.5%	13.5%	12.1%	7.9%
팬데믹 기간 늘어난 가계 부채 비율	1.9%	6.2%	1.1%	2.0%	0.1%	10.4%

KBS 자료 BLS/국제경제연구원

5

II.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확대 정책

2. 전세계적인 재정확장을 통한 민생위기 대응책

3. 세계적으로 2023년 경제위기 대비 대책도 재정확장 정책이 주류

- 1)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7,370억 달러 재정 확보 후 4,370억 공공투자 확대
 → 법인세 15% 최저한세 2,220억, 처방약가 인하 2,650억, 자사주 매입시 1% 개별소비세 증세
 → 에너지 및 기후에 3,690억, 건강보험개혁 640억 등 공공투자, 재정적자 감축에 3,000억 달러
- 2) 독일 : 960억+ 2,000억 유로 에너지보조금 천연가스와 전기료 가격상한 등 가계와 기업지원
- 3) 프랑스 : 200억 유로 사회보장수당 인상, 저소득 노동자 소득세면제 등 물가대응 재정지원
- 4) 일본 : 가계에 대한 전기와 가스요금 보조, 유가상승 억제, 임금인상 지원 등 인플레종합대책에 39조엔 재정확대 및 법인세 증세 추진

4. EU 에너지기업 대상으로 직전 3년 평균이익 초과하는 이익의 33% 연대기여금으로 부과

- 1)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횡재세(초과이익세) 부과 논의 중
- 2) 한국도 원자재가격 상승과 부동산버블로 오히려 혜택을 본 정유와 은행업계에 부과 논의

6

II.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확대 정책



7

II.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확대 정책

2. 경제적 약자계층에 초점 맞춘 재정확대 정책 필요

1. 감세정책은 민생위기에 대응한 실사구시 정책이기 보다 의례적 보수정책의 답습

1) OECD 주요국 중 감세정책 추진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뿐

→ 영국 트러스트 총리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다 사임 후 영국도 증세정책 전환

2)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반성적 고려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

→ 그때 낙수효과 없었지만 지금은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부정적 효과도 그대로 재현가능성

2.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축소된 취약계층과 경제적 약자 지원 예산 대폭 삭감

1) 공공임대 예산 5조7천억 삭감, 공공의료 예산 전년대비 61.3%, 약 3조 950억 원 삭감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전년대비 19.3%, 10% 감축

3)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전년대비 19.3% 감액

4) 자영업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전부 삭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등 중소기업 산업지원 예산 대폭 삭감

8

II.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확대 정책

3.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교훈

1. 대기업 감세지원을 통한 투자확대로 고용창출 등 낙수효과 기대했으나

1)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26조7,000억원

2) 대기업 투자 늘리지 않고 고용율도 노무현 정부 보다 높지 않아

→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투자 규모는 2009년~2012년 4년 간 23조1,000억원, 직전 4년(2005년~2008년) 33조5,000억 보다 10조원 이상 적은 규모

→ 고용율도 2012년(59.4%) 약간 올랐지만 2007년(59.8%), 2008년(59.5%) 보다 낮았다.

2. 대기업들 감세혜택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놓기만 :

1) 28개 대기업 사내유보금 2009년 72조4,000억원에서 2013년 521.3조원으로 폭증

2) 박근혜 정부 최경환노믹스에서 기업환류세제 신설하여 사내유보금 투자와 배당 등 유도

9

II.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확대 정책

3.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교훈

3. 결국, 재정악화만 초래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로 이어져

- 1) 박근혜 정부에서 1년에 10조 세수결손 발생하자 담배세 25%, 주민세, 근로소득세 공제축소 등 서민증세로 대응. 결국 기대한 낙수효과 없이 부자감세에서 서민증세로 귀결 됨.
- 2) 윤정부 벌써 지난 1월 법인·부가세 4.4조 ↓, 자산세수 2.3조 ↓ 등 7조 감소 세수평균

4.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다른 결과 낼 수 있을까?

- 1) 그때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기업들 투자 위축되어 낙수효과 없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주장
- 2) 경기침체 국면으로 대기업들 투자에 신중하고 반도체, 전기차 등 해외투자가 대부분...

10

II.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확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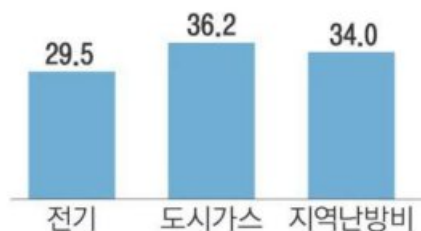
4. 관리물가 관리 등 물가안정 정책도 필요

1. 2023년 초 물가상승의 주범은 공공요금 인상

- 1)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물가인상 기여율 0.94%,
→2022년 석유류 기여율 0.23% 보다 높음
- 2) 지방정부도 정부 공기업 부채감축 개혁 기조 따르면 지하철·버스 요금이 20-30% 인상 예정

2023년 1월 에너지 요금 상승률

단위: 전년 동월 대비 %, 자료: 통계청



- 3) 코문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도그마에 빠져 공공요금 급속인상

→속도조절 않으면 기업계층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제위기 체감 더욱 심각해져

11

II. 감세정책 VS. 복지 등 재정책대 정책

4. 관리물가 관리 등 물가안정 대책도 필요

2. 정부가 관리가능한 관리물가가 물가인상 주도

1) 관리물가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
예) 공공부문에서 직접 공급하는 품목, 민간에서 공급하는 품목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거나 인허가·신고 등 간접적 행정규제를 받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에서 산출

< 관리물가상승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주요 품목별 관리물가 기여도 >

품목	'21	'22	'23.M1
전기료	-0.04	1.00	2.38
도시가스	-0.34	0.95	2.15
보험서비스료	0.39	0.66	0.61
지역난방비	-0.01	0.08	0.23
외래진료비	0.18	0.23	0.18
병원검사료	-0.13	-0.20	-0.12
유치원납입금	-0.07	-0.15	-0.16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21년 하반기 +로 전환 후 올 1월에 5.8%로 전체 소비자물가 5.2%를 상회. 물가상승 주도
→ 관리물가 인상 관리정책 필요

12

III. 규제완화(자율규제) VS. 노동 등 경제적 약자 보호

1. 하청,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교섭권 확대

1. 고물가로 실질임금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교섭제도 지원

- 1) 원청, 본사 대기업이 사실상 노무비나 작업방식 등 실질적 결정하여 하청, 대리점과 계약
→ 사내하청, 플랫폼 종사자(택배, 배달) 등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권한 가진 사용자와 교섭해야
- 2) 택배노조 사건에서 실질적 근로조건 정하는 택배본사에 교섭의무 확인하는 행정법원 판결
→ 노동조합법에 "노동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노조 활동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는 자"로 사용자 정의

2. 플랫폼-소비를 연결하는 종사자(택배, 배달 등)의 교섭권 보장

- 1) 급속한 플랫폼경제 확대로 플랫폼 종사자 증가하나 근로(작업)조건 보호는 사각지대
- 2) 미국 캘리포니아주 ABC 판결처럼 노동자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플랫폼 대기업으로 전환
- 3) 플랫폼종사자 노동조합이나 단체에도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권 부여하는 방안 등

13

III. 규제완화(자율규제) VS. 노동 등 경제적 약자 보호

2.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자율규제로 해결 어려워

1. "네-카-쿠-배" 에서 플랫폼에서 독과점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1) 카카오 불통사태로 180만이 다른 플랫폼으로 갔다가 1주일만에 다시 대부분 복귀
- 2) 이전하려면 카카오에서 활동내역과 거래내역 등을 가지고 옮겨가야 하는데...
- 3)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와 lock-in 효과로 독과점 공고화

2.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과도한 수수료

- 1) 중개서비스에서도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매출액의 15-20%까지
- 2) 독점적 지위 이용 중개 외에도 배달-결제-광고-물류 등도 함께 이용해야 → 각 수수료 지급
- 3) 결제수수료도 다른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아

3. 시장점유율 확보 후에는 자사상품 우대 등 노골적인 불공정행위도 많아져

- 1) 허위 리뷰와 광고 강요, 매출증가에 따른 판매성과금 요구, 쿠팡 워너시스템 등
- 2) 중개판매 빅데이터로 자사상품 진출 후 자사상품 우대 중개 상품 차별행위
예) 카카오 택시 -90% 시장점유율. 카카오 블루라는 가맹점에 배차 몰아주기, 직영점 "크루"도
- 3) 카카오는 택시영업을 비롯 수많은 중소기업에 진출 소상공인 생존영역 잠식

14

III. 규제완화(자율규제) VS. 노동 등 경제적 약자 보호

2.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자율규제로 해결 어려워

4. EU의 독과점 플랫폼규제 디지털 시장법(DMA) 2023년 5월부터 시행

- 1) 시장 구분하여 점유율로 하지 않고 이용자수나 매출액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독과점) 결정
- 2) 자사우대 타사 차별행위 금지와 이해충돌 상황(동일 플랫폼 직접판매) 회피의무
- 3) lock-in 효과 해소 위한 데이터 이동성, 호환성 프로그램 설치 의무

5.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감시 전문 감독행정 기구의 필요성

- 1) 플랫폼은 거래행위 감시 외에 알고리즘의 조작, 프로그램자체의 불공정성 분석도 필요
- 2) 미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기술전문가도 참여하는 전자시장감시국 설치 입법
- 3) 유럽은 통신감독기구에서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감시업무도 추진
- 4) 우리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내 4-5명의 TF에서 감독행정

6. 플랫폼 "혁신인가-규제인가" 비생산적 논쟁으로 2-3년 허송세월 입법 논의...

- 1) 문정부 혁신성장 담론에 갇혀 혁신기업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편적 규제도 반대
- 2) 유럽과 미국은 플랫폼기업의 성장지원과 독과점화 된 GAFA에 대한 독점규제 병행 추진
- 3) 우리도 독과점화 현상 뚜렷한 "네카쿠배"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정책 필요

15

IV. 규제완화(자율규제) VS. 노동 등 경제적 약자 보호

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조건 개선 교섭지원 제도

1. 경기침체기 본사의 부담전가 등 불공정행위 심화 가능성

- 1) 경기침체기에 대기업들은 그 부담을 납품 중소기업이나 가맹·대리점 등에 전가하는 관행
- 2)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 필수물품 고가 구입강제 행위 늘어날 가능성
- 예) 치킨 가맹점의 올리브유, 김밥 가맹점의 단무지 등, 피자 가맹점 치즈 등 많은 사례...
- 3) 플랫폼 온라인 거래 늘어나며 플랫폼의 판매성과금, 광고 등 부담 전가 행위
- 4) 온라인 영업지역 범위,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거래조건 정하기 위한 교섭도 필요

2. 플랫폼 중개거래에서도 거래조건 개선 위해 입점업체 단체의 단체교섭 필요

- 1) EU의 온라인 중개서비스 투명성, 공정성 강화 규칙 : 우리의 온플법에 영향
입점업체와 고객정보 공유, 노출순위(ranking) 기준 공개, 불공정 문제 고충처리시스템 등 규정
- 2) 위와 같은 거래조건에 대한 불공정 문제에 대해 입점업체 단체나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 단체소송 전 또는 중에 입점업체 단체 등이 플랫폼기업과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게 됨
- 3) 민생지원원 온플법안 등에 단체교섭 제도 규정하고 있음.

16

IV. 규제완화(자율규제) VS. 노동 등 경제적 약자 보호

3.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조건 개선 교섭지원 제도

3.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점주단체의 단체교섭권 중요

- 1)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단체 사이 거래조건 개선과 불공정 방지를 위한 단체교섭권 필요
- 2) 가맹점법에는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점주단체 구성권 명문화
→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수단 없어 사회적 여론이 없으면 교섭 어려움
- 3) 대리점법에서는 아예 대리점주단체 구성권이나 단체교섭권을 명문화 하지도 않음
- 4) 가맹점법은 상생교섭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불응을 불공정행위로
대리점법은 점주단체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 법개정 필요

4.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단체에도 단체교섭권 필요

- 1) 일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단체교섭권과 상대방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
- 2)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공동교섭권 명문화 필요
- 3) 공정위의 격렬한(?) 반대 있으나, 소비자 상대 아니고 기업간 B2B 거래에만 적용하면 가능

17

IV. 규제완화(자율규제) VS. 노동 등 경제적약자 보호

4. 임대료와 관리비 등 비용부담 감소대책도

1. 상가임대차법상의 임대료 감액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1) 윤석열 정부의 임대인-임차인-정부 1/3씩 임대료 나눔제

→ 시행하면 임대인에게 부가세, 공공요금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 그러나 시행 사례 거의 없음

2) 문정부 말 범정부 협력 공정한 임대료 조정 가이드라인 발표도 시행도 하지 않음

3) 임대인이 조정거부해도 각하하지 않고 조정안 제시하도록 상가임대차 조정제도 개선

→ 조정위원회가 임료시세 등 조사하여 조정안 제시하면 임대인이 수용할 수도 있고

4) 법원이 조정위원회가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시한 조정안을 신속히 결정하면

→ 임대인 입장에서 법원에 가면 어차피 조정안 수용되면 조정에 적극 임하게 됨

2.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 제도를 “소송”이 아니라 “비송”으로

1) 비송사건절차법에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비송사건으로 규정

2) 분쟁조정과 법원의 재판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법제화 필요

18

IV. 규제완화(자율규제) VS. 노동 등 경제적약자 보호

4. 임대료와 관리비 등 비용부담 감소대책도

3.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2배나 되나 감독의 사각지대

1) 상가,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장부 작성, 비치의무도 없음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장부 작성·공개의무

2)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독권한도 없고, 관리인이 1년에 한번 보고의무도 있으나 낮은 과태료

→아파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부 제출요구, 감사 및 처벌 등 감독권한이 있음

3) 상가건물 분양 시 분양회사 분양계약서에 관리인 기입한 후 이를 바탕으로 10-20년 관리

→2년에 한번 관리인 선거를 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인 신고하지 않는 관리단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없음

4) 이렇게 불투명한 상가건물 관리도 관리비가 같은 면적당 아파트의 2배나 됨

4. 50세대 이상 상가건물에 대해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가건물 관리법” 제정 필요

19

IV. 수출로 위기돌파 VS. 내수 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도

1. 수출로 위기돌파 정책의 한계

1. <대통령 신년사>에서 “수출로 위기 돌파” 정책 강조, 그러나 한계도

- 1)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해외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 2)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 탈 세계화 추세, 공급망 재편,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침체
 - 3) 수출의 30% 이상 차지하는 중국 시장과 무역관계의 불안정 등 수출의 어려움
- 예) 2월 무역수지 53억 달러 적자로 1년째 적자, 수출액이 501억 달러로 전년대비 7.5% 감소

2. 수출로 위기돌파 정책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재편 산업 ‘정의로운 전환 정책’도 병행해야

- 1) 수출주력품 반도체 세제지원 집중: 시설투자, R&D에 대만 5%, 25%에 비해 한국은 8%, 50%
- 2) 지역상권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정책, 전기차 산업재편에 따른 위기에 대한 지원대책 등
- 3) 상가임대료, 관리비 등 자영업자 비용부담 절감대책 등도 필요

20

IV. 수출로 위기 돌파 VS. 내수 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도

2.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도 필요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문재인 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 1) **지역상생구역**: 2년간 연속하여 임대료가 5%(조례로 정하는 상한) 초과하여 상승
→ 상인, 임대인 등 2/3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 대가로 상가건물 대수선비와 개축 비용 지원,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주차장 설치 특례 등 지원
- 2) **지역상생구역 내 업종제한: 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본사 직영점 제한**
예) 스타벅스나 다이소, 올리브영 등 연매출(예: 도소매업 1,00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직영점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상인 동의 없이 출점할 수 없도록
- 3) **자율상권구역(상권 쇠퇴구역)**: 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2년간 축소
→ 자율상권조합 구성 하여 임대료 인상을 제한, 온누리상품권 특례, 특성화 사업 등 지원

21

IV. 수출로 위기돌파 VS. 내수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도

2.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도 필요

3. 윤석열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은 시작하자 추진력 상실?

- 1) 실제로 지정된 구역은 얼마나?
- 2) 지속적인 재정지원 되나? 민간 협업을 강조하는 로컬상권 정책으로 전환?
- 3) 업종제한 등 대기업 진출에 대한 규제정책은 실제로 실현되나?

4. 지역화폐와 지역상권 활성화 관계는 여전히 유효

- 1)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 지역 소비가 서울본사의 수입증대로 이어지는 것 차단
- 2) 지역 소비가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 3) 윤정부의 지역화폐 축소 기조 : 예산축소, 적용제한(인천은 매출 3억 이하 매장에만 적용)

22

IV. 수출로 위기돌파 VS. 내수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도

3. 전기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부품 및 정비업 종사자의 위기

1.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산업재편으로 내연기관 부품사와 노동자의 생존위기

- 1) 기후위기 대응 산업정책 중 전기차 전환 : 내연기관 부품 3만→1만 축소
- 2) 전체 부품사 46.8%인 4195곳 문 닫고, 10.8만 일자리 감소 전망했으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전기차 부품사 미국투자 요구 받아 더 많은 일자리 감소 전망
- 3) 정비업체 종사자와 업체 9.45만명, 3.6만개(2021)도 대규모 인력과 점포 축소 불가피

2. 전기차 전환과 소상공인에게도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적용

- 1) 탄소중립기본법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일자리, 지역 경제 위기 대비 직업교육, 신사업 전환 등 지원기금 마련
- 2) “정의로운 전환” 정책 대상을 제조업 노동자만 아니라 10만 정비업 종사자에도 적용
→ 전기차 정비와 관리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업훈련, 연관산업 취업알선 정책 등

23

IV. 수출로 위기 돌파 VS. 내수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도

3. 전기차 전환과 내연기관 부품 및 정비업 종사자의 위기

3. 자동차 정비산업의 보험회사 하청계열화, 영세화 극복 정책도 필요

- 1) 2009와 2021 정비업체 종사자와 업체수는 각각 9.8만→9.45만명, 3.4만→3.6만개
→ 결국 업체수 늘고 종사자 수 줄어 정비업체의 소형화, 특히 종합정비업(사고담당) 축소
- 2) 정비 물량의 80%를 보험사가 제공하는 수요독점 시장화
→ 정비업, 부품대리점, 견인차, 렌터카, 자동차유리, 케미컬, 부자재 등 보험사 하청계열화
- 3) 대금 미지급, 손해사정내역 미공개, 견적 없이 수리 후 수리대금 일방 결정하여 통보 등
→ 보험사는 거래당사자 아니라 주장 : 보험수리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하는 입법 필요

24

V. 빚내서 경기부양 VS. 가계부채 축소와 채무조정

1. 자영업자 부채 상황

1. 코로나 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원한 대출의 상환문제

- 1)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미 상환 시작 됨.
- 2)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내년초부터 상환 시작

2. 새출발기금(배드뱅크)의 필요성과 한계

- 1) 참여하는 경우 신용거래중단의 우려 등으로 아직 참여도가 높지 않음
- 2) 새출발 기금과 같은 배드뱅크 외에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의 활성화 정책도 필요
→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졸업율은 평균 40% 수준. 채권자 금융기관 수용가능 범위에서 조정
- 3) 여러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9월에 123만명) 등은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필요
- 4) 금융기관의 요구로 변제기간도 10년으로 법원의 3년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

25

V. 빛내서 경기부양 VS. 가계부채 축소와 채무조정

2. 소상공인 재기

1.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 1) 재창업 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대상 교육 + 컨설팅 + 재창업자금
- 2) 원스톱 폐업지원 : 폐업(예정) 사전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비 지원
- 3) 재도전 역량강화 : 폐업(예정) 전직교육, 사업전환교육, 전직장려수당

2. 이미 폐업 후는 재기 어려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재기지원 집중되어야

- 1) 이미 폐업한 경우 재기자금도 소진, 재기비전도 상실, 의욕도 상실 경우가 많아..
- 2) 경영이 어려워질 때 : 파산·회생 등 통해 채무정리 후 재기지원 받아 재기할 비전도 수립
- 3) 문제는 폐업 직전까지 마냥 버티는 소상공인이 대부분
→ 소상공인진흥공단 기다리지 말고 경영어려운 소상공인 방문하여 채무조정+재기지원 설명

26

V. 빛내서 경기부양 VS. 가계부채 축소와 채무조정

3. 자영업자, 한계채무자 등의 파산·회생 지원

1.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활성화 필요

- 1) 자영업자는 많은 부채를 안고 폐업 경우 많은데 법원은 정기소득 있는 회생 중심
- 2) 서울회생법원 다른 법원 사이에 처리속도, 인용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3)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전문 도산법원을 수원, 부산, 광주 등에 설립 필요(법안 법사위 통과)

2. 채무조정 없는 재기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 1) 재창업지원이나 복지지원 재정이 채무변제 사용되거나 빛에 시달리면 재기의욕 상실
- 2) 서울시 금융복지지원센터처럼 채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지원하며 재기지원도 원스톱으로
예) 서울회생법원 회생신청의 11.8%가 서울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지원

27

토론 2

소상공인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모색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소상공인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모색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소상공인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모색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1. 연속된 악재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1) 코로나 위기

- 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 ② 부족한 지원으로 인한 대출 폭증
 - ☞ 코로나 기간 동안 총 7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자영업 부채는 코로나 이후 매년 100조 증가
 - ☞ 소상공인 대출잔액 1,000조
- ③ 비대면 거래로의 급격한 전환
 - ☞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빠른 변화
 - ☞ 플랫폼 수수료 / 배달비 등의 부담으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소상공/자영업)의 매출 대비 소득 하락
- ④ 최저임금 부담과 구인난
 - ☞ 소득 감소로 인한 임금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한 구인난의 이중고
- ⑤ 폐업 위기
 - ☞ 안정적 퇴로가 부재한 상황에서 폐업의 위기와 갈등 (부족한 폐업 지원)
 - ☞ 채무 부담으로 인한 폐업 기피 현상과 실질 폐업 증가

1. 연속된 악재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2) 3고 현상으로 인한 경제 상화 악화

- ① 원재료비 상승으로 소득 급감
 - ☞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소득 감소 현상과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 감소
- ②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금리 부담 확산
 - ☞ 2020년 1.97%에서 2022년 4.1% 대출 금리 인상
- ③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증가와 소비 위축
 - ☞ 난방비/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증가
 - ☞ 난방비/전기요금/택시요금 인상 등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 ④ 대출 상환 시기 도래
 - ☞ 대출금 상환 시기 도래로 인한 이자 및 원금 부담
 - ☞ 다중 채무 / 부실 차주 급증

2. 소상공인 부채

1) 소상공인 대출 상환

- ① 소상공인 신용대출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② 정부정책 자금대출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③ 2023년 소상공인 신용대출과 정부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시기가 중첩되면서 부채 부담과 부실 차주 급증 전망
- ④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3년 지속
 - ☞ 정부는 그간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폭탄 넘기기 식으로 연장
 - ☞ 근본적 부채 탕감 대책 필요

2) 새출발기금

- ① 2022년 캠프 운영의 새출발기금 출범
- ② 23년 2월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1만 7,737명, 채무액은 2조 6,231억원이지만 실제 약정체결까지 연결된 경우는 80여건에 불과
- ③ 실적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정책이라는 캠프의 설명 (추가로 4,211명 약정 예정)
- ④ 신용 패널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 활용의 부담
- 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이용 제한

3. 소비활성화 대책

1) 지역화폐 지원예산 확대

- ① 지역화폐 지원예산 추이 : 2020년 6,298억원→2021년 1조 3,522억원→2022년 7,053억원 →2023년 6,053억원
- ② 2023년에는 지역별로 차등 배분
- ③ 지역 상황에 따라 발행량을 축소하거나, 소비자 혜택(할인율)을 축소
- ④ 지역화폐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적/정치적 이견이 있는데,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인 동시에 최고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

2)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변경

- 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의무휴업 제도 폐지 시도
- ② 대구시는 2월부터 월요일 의무휴업 시행
 - ☞ 청주시 등 지자체 등도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
- ③ 전경련 조사에서도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이용비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효과 입증
- ④ 더불어민주당에서 복합쇼핑몰 출점 및 대형마트 등의 대형유통의 규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 표명
 - ☞ 보다 명확하게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입장 및 대책 밝혀야

4. 온라인 플랫폼 규제

1)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 ① 미국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EU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등으로 플랫폼 규제
- ②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불발
 -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와 과방위의 이견으로 입법 불발
- ③ 불공정의 대표적인 플랫폼의 국정감사 출석 배제 등 소상공인의 불만 폭증
- ④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에 이은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발의
- 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신 자율상생을 추구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일부 입장 선회
- ⑥ 플랫폼은 일방적 수수료체계 및 정책변경, 이용사업자에 대한 광고비 부담 전가 외에 해당 사업의 직접 진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무한 확장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서는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

2)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

- ①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운영
 - ☞ 배달앱과 오픈마켓 분야의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단체 간의 자율 상생 시도
- ② 이용사업자는 강력하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상한제 및 우대구간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플랫폼사는 표준계약서 도입 수준으로 접근

5. 지속가능한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

1) 소상공인·전통시장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 과정

- ① 코로나 기간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 ②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이 확산됐으나, 지속가능한 재원투입 한계 및 지역화폐 예산 축소로 인해 어두운 전망
- ③ 전통시장의 경우 배달이 가능한 P&P 매니저 지원 방식으로 클릭머스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나, 지원 예산이 중단되면서 플랫폼 이용 중단
- ④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정부의 중기부에서 키오스크 및 무인 점포 확산을 중점 사업으로 시행했으나, 골목상권 과밀화 현상을 초래

2) 향후 온라인/디지털 전환 방향

- ① 규제와 병행한 지원
 - ☞ 공인, 제조업에 대한 오픈마켓 입점 지원 및 공공플랫폼 활성화
 - ☞ 기존 플랫폼 공정/독점방지 및 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적정 체계 구축 및 규제 필요
 - ☞ 플랫폼 중심의 유통으로 인한 기존 도매·유통의 붕괴 가속화. 관련 입법 정비 필요
- ② 공동유통/물류와 병행한 클릭머스 방식의 유통 플랫폼 활성화
 - ☞ 마트, 슈퍼마켓 등에 대한 마이크로플랫폼 구축 지원 절실
- ③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형 공공 플랫폼 체계 구축

6. 난방비 지원 대책

1)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

- ① 정부의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117만 가구, 가스요금 할인 160만 가구에 총 1,800억 지원 발표
- ② 비판 여론이 일자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 발표하고 추가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
 -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할인방안 검토 필요
- ③ 해외의 경우 유엔 사무총장이 석유와 가스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이를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라고 촉구
- ④ 독일은 에너지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가정과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등에 가스요금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 도입
- ⑤ 정부는 소상공인에 90억을 투입해 편의점과 개인 슈퍼마켓의 냉장고 문닫기 사업을 추진하고, 식품 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3만대를 교체.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가로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추진

7. 소상공인의 정의로운 탄소중립 대책 필요

1) 탄소중립 사회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

- 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과정에 자동차부품업과 정비업의 생존의 위기
- ②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기업들이 자원순환업에 진입하면서 관련 소상공인 및 종사자 일자리의 위기
 - ↳ 관련업계가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을 동반성장위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했으나 상생협력 체결
- ③ 1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한 영업의 위기
 - ↳ 카페의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 ↳ 공병 수납제도 등으로 인한 영업의 위기

2)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절실

- ① 구체적인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부처의 합동 대응 필요
 - ↳ 환경부 / 교통부 / 산업부 / 보건복지부 등
- ② 친환경차 전환 과정의 완성차 업계와 관련업계의 상생 필요
 - ↳ 친환경차 부품 및 정비 교육 및 본사 중심의 정비업 운영 규제 필요
- ③ 대기업 주도가 아닌 소상공인 참여가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재정립

8.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1) 소상공인도 참여가능한 전국민 고용보험 현실화

- ① 소상공·자영업의 경우 폐업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 방식의 전국민 고용보험에 참여도 저하
- ② 실업구제 방식의 전국민고용보험에서 실업방지 방식(소득보전)의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전환하여 소상공·자영업의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확대 필요
- ③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자영업 적극 참여방식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설계를 준비했으나,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까지만 포함하고, 소상공인 소득보전 방식의 참여는 불발
- ④ 지난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연구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상공·자영업 소득보전 방식을 일부도입한 전국민고용보험 개편안 연구발표

2) 사회보험 개편 / 상병수당 도입

- ① 소상공·자영업의 사회보험 개편
 - ☞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인하
 - ☞ 무급 가족종사원에 대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도입 필요
- ② 상병수당 제도 전면 도입
 -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대상의 상병수당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 상병수당은 일종의 소득보전

토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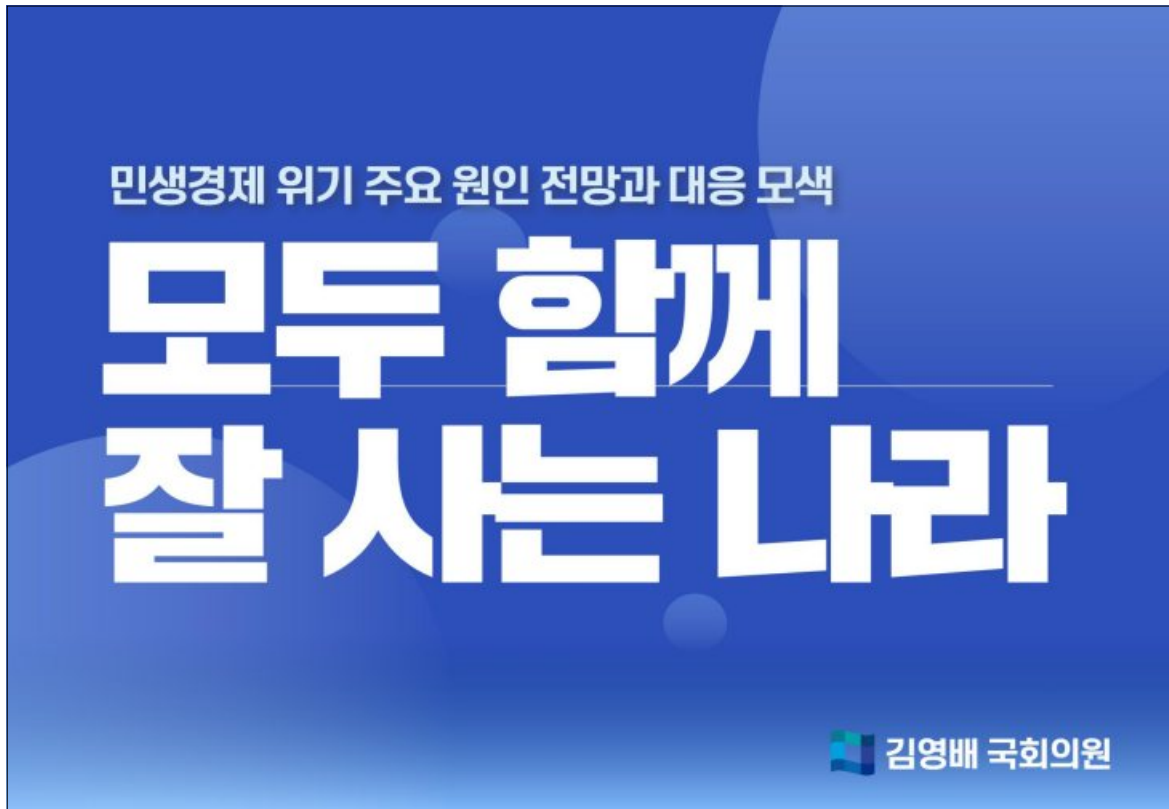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김영배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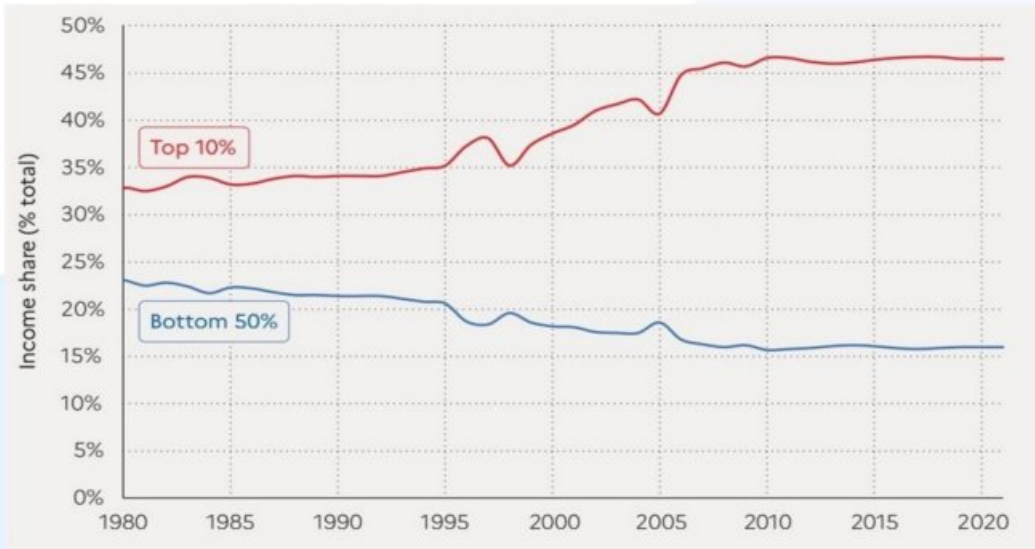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김영배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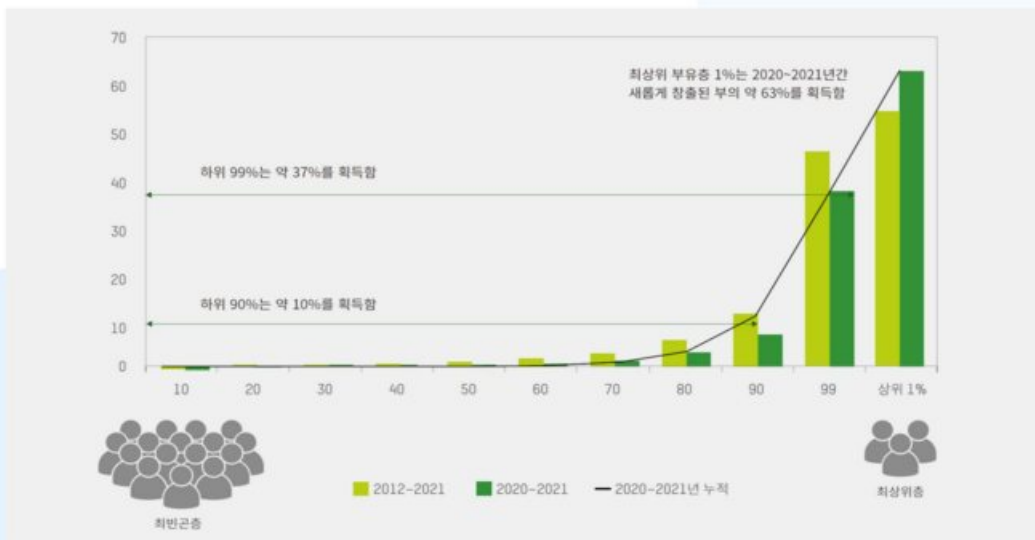


커져가는 양극화 : 한국의 소득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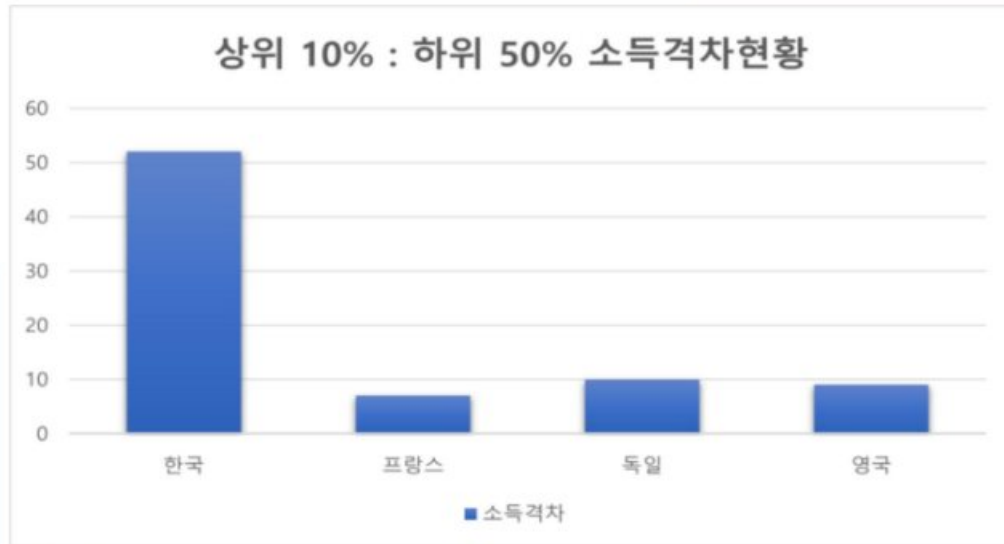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 / 파리 경제대학 부속 연구기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WIL)'

새롭게 창출된 부의 획득 비중(전체 중 %)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3 / https://www.oxfam.or.kr/content_survival-of-the-richest

상위 10% : 하위 50% 소득격차 현황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3 / <https://blog.naver.com/lawer8737/222590177498>

대한민국, 민생위기의 시대로

중산층의 저소득화 저소득층의 빈민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경제위기!

극단적 양극화, 국가의 역할 재설정해야

1. 사회적 합의
2. 재정의 역할
3. 정책의 방향

1.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지속
가능성

포용성

낙수효과에만 의존하는 기존 모델은 현재의 한국 양극화 문제 해결 불가능

2. 재정의 역할

때 아닌 감세정책



윤석열 정부의 감세중심 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따른 차등과세 -> 가액기준 과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및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상속세)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한도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의
감세정책은 민생위기를 심화

영국 리즈 트러스 결국 사퇴... '44일 총리'
불명예

트러스 감세 정책 혼선에 영국 경제 '대혼란'

한국경제 2단 발표식
2022.10.21. 09:26 2,481 조회

[한겨레21]

리시 수백 새 영국 내각, 감세 취소하고 증세 발표
한국은 경제위기 오는데 5년간 60조원 감세 추진

2. 재정의 역할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3. 정책의 방향과 원칙

01

경제활동에서
핵심적인
부가가치를 생산
하는 주체가
정당한 댓가를
받는 구조와
환경 구축



02

중장기적인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인
거시경제
정책수립과 실행



03

사람에 투자하고,
국민의 소득향상,
자산형성을 돕는
방향의 정책과
제도기반 마련



3. 정책의 방향과 원칙

새로운 성장모델을 통한 민생 활력 제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정부-시장-시민사회 '황금의 삼각형'을 통한 새로운 성장추진 체계 필요



UN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예정

사회연대경제에 주목



민생을 위한 정치와 정당의 역할

민생정치의 핵심은
'국민이 먹고 살기 편하게 만드는 것'

01

정치와 정당의 역할 중요

우선순위 설정
적극적 태도
정합성, 시의적절성

02

생활비 부담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 마련 필요

국민의 생활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비용을 관리, 축소시켜
주는 민생정책

03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아직 성과를 얻지 못한
입법과제는
책임감으로 마무리

민생을 위한 정치와 정당의 역할

민주당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서민안정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 책임법, 반값 교통비 지원법
청년·미래 세대 지원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청년 구직활동 지원법, 청소년 자립 지원 법, 학자금 부담 완화법
갑질 근절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법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온전한 손실보장법, 노란봉투법
국민 피해 지원	수해 피해 지원법, 쌀값 정상화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금리폭리방지법
디지털 신사업 지원 및 피해 방지	타투 합법화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글로벌 콘텐츠 무임승차 근절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하는 민주주의는 '질 좋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주주의'
- 민생과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의의를 유권자에게 증명하기 위한 핵심 필요조건
- 이를 위해 정치와 정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함

≡ 민생회복의 첫걸음은, 정당의 제역할로부터

감사합니다

